충남지역 고려인 이주 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

충청남도의회 의정토론회

다른 내:일 포럼 2021-③ | 제9차

2021년 05월 25일

충남지역 고려인 이주 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

2021년 5월 25일(화) 14:00 - 16:30

충남도서관 대강당

좌 장 충청남도의회 이선영 의원

주제발표

고려인 이주현실과 지자체 지원제도의 모색
우복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원

지역 고려인 노동권 실태와 지역사회의 과제
류 민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

고려인 자녀 돌봄 및 교육 현실과 과제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지정토론

박사다 당진지역 고려인
김진영 사단법인 너머 사무국장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김학로 당진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소병욱 충청남도 가족다문화정책팀장

유튜브 생중계 bit.ly/노동권익티비
현장 참여신청 bit.ly/고려인포럼
문의 010 5898 9730 (류민)

공동주최
충청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실)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충청남도의회

14:00 - 14:15	개회 및 내빈소개
	축사 01	충청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축사 02	충청남도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
14:15 - 15:15	**주제 발표**
14:15 - 14:35	**발표 01	고려인 이주현실과 지자체 지원제도의 모색**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우복남 선임연구위원
14:35 - 14:55	**발표 02	지역 고려인 노동권 실태와 지역사회의 과제**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류민 정책기획팀장
14:55 - 15:15	**발표 03	고려인 자녀 돌봄 및 교육 현실과 과제**
	충남연구원 윤향희 책임연구원
15:15 - 15:25	쉬는 시간
15:25 - 16:15	**지정 토론	좌장 : 충청남도의회 이선영 의원**
15:25 - 15:35	토론 01	당진지역 고려인 박사다
15:35 - 15:45	토론 02	사단법인 너머 김진영 사무국장
15:45 - 15:55	토론 03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우삼열 소장
15:55 - 16:05	토론 04	당진역사문화연구소 김학로 소장
16:05 - 16:15	토론 05	충청남도 소병욱 가족다문화정책팀장
16:15 - 16:30	**종합 토론**
16:15 - 16:30	질의응답 및 토론, 주제발표자 마무리 발언
16:30	폐회

목차 | 자료집

005	프로그램
007	목차
009	**발표 01	고려인 이주 현실과 지자체 지원 제도의 모색**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우복남 선임연구위원
031	**발표 02	지역 고려인 노동 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류민 정책기획팀장
000	**발표 03	고려인 자녀의 한국생활적응 교육지원** 충남연구원 윤향희 책임연구원
000	토론 01	당진지역 고려인 박사다
000	토론 02	사단법인 너머 김진영 사무국장
000	토론 03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우삼열 소장
000	토론 04	당진역사문화연구소 김학로 소장
000	토론 05	충청남도 소병욱 가족다문화정책팀장

고려인 이주 현실과 지자체 지원 제도의 모색

우복남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고려인 이주 현실과 지자체 지원 제도의 모색

(2021.05.25. 충청남도의회·충남노동권익센터)

우 복 남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순 서

1. <동포>와 <고려인> 현황
2. 고려인/사할린 한인 생활실태
3. 고려인/사할린 한인 관련 법률 현황
4. 고려인/사할린 한인 관련 조례 현황
5. 지자체 고려인 주민 지원 정책 사례
6. 충남의 고려인 주민 지원 제도 모색

1. 국내 정착 동포와 고려인 현황

국내 정착 고려인 현황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1년 3월호) '외국국적 동포 현황'

- 2021년 3월 기준 국내거주 동포는 약 80만명
- 주요 7개국, 3유형 '고려인'은 76,894명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7개국
- 재외동포(F-4), 영주(F-5), 방문취업(H-2)

***귀화, 동반가족, 유학 등 다른 유형 제외 수치**

CWPDI 4

국내 정착 고려인 현황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1년 3월호) '외국국적 동포 현황'

▪ 7개국, 3유형 고려인 76,894명 국가별 현황

-우즈벡, 러시아, 카자흐스탄 순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계
31,459	26,484	13,677	2,397	2,319	280	278	**76,894**

CWPDI 5

국내 고려인 현황

❖국내 고려인 현황(F-4, F-5, H-2)

▪ 아직 영주권자는 적은 편이지만 점차 증가

(2021.03.31. 현재, 단위 : 명)

재외동포(F-4) 러>우즈벡>카자흐 순	47,273
영주(F-5) 러>우즈벡>카자흐 순	1,039
방문취업(H-2) 우즈벡>카자흐>우크라이나	21,642
계	76,894

CWPDI 6

충남 고려인 현황

❖중앙아시아/한국계러시아 7개국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2019년)

- 충남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수, 각 전국 2위
- 2019년 충남 주요 7개국 출신 외국인 현황
  -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6,572명(고려인)
  - 등록외국인 9,039(대부분 고려인)
  - 총 15,611명
    (귀화자 등 제외한 외국국적자만 집계)

CWPDI 7

고려인에 관한 국가적 관심

❖고려인과 그 가족의 국내 입국과 정착 확대 중

❖그렇지만 고려인에 관한 역사,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서 아직 고려인은 여전히 여느 이주노동자/해외교포와 다를 바 없는 **외국인, 이방인, 방문객으로 여겨지는 실정**

- **일반인 뿐 아니라 정부/공무원 인식도 낮은 수준**
- 중앙정부는 일반 현황/수 파악과 노동력으로서 기본적 관리, 외국인 정책 내 동포 과제를 일부 포함하는 수준, 고려인 지원 관련 법/정책 부재

CWPDI 8

고려인에 관한 지역사회 관심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는 고려인과 고려인 밀집지역에 관한 인지도가 낮고 정책적 관심이 부족한 실정

❖기초 지자체의 경우에도 사실상 고려인가족의 증가에 대응하지 않거나, 대응하더라도 체계적 조사/정책에 의한 대응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진행하는 수준

❖그러나 정주 밀집도가 높고 중국계동포(조선족)와는 다른 특성 등으로 지역의 관심 필요

CWPDI 9

2. 고려인/사할린 한인 생활실태

고려인/사할린 한인 실태조사 현황

❖(전반적)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 관련 조사연구는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부족

- 주로 학술연구로 소규모로, 간헐적으로 진행
- 정부정책 기초자료가 되는 실태조사는 드물고,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기에 역부족인 상황
- 고려인 다수 거주, 밀집지역 경우에도 일부 지자체(경기/인천)에서 양적 실태조사를 실시했을 뿐, 아직 지자체 전반의 관심은 부족

- 2019.12. 전체 고려인 수 2위(12,441명)인 충남도 조사 부재

CWPDI 11

고려인/사할린 한인 실태조사 현황

❖(중앙정부) 고려인 일반/사할린 한인 실태조사

- 2010년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책연구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수행한 고려인 일반 및 사할린 한인 실태조사는 재외동포재단이 발주한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일부 실태조사에 한정
- 2014년 796명 조사, 2015년 1,125명 조사

부처	조사명	연구자
외교부/재외동포재단	국내거주 러시아CIS(고려인) 현황조사 II.	오정은 외. 2015.
외교부/재외동포재단	국내 거주 고려인동포 실태조사	임채완 외. 2014.

CWPDI 12

고려인/사할린 한인 실태조사 현황

❖(중앙정부) 고려인 일반 및 사할린 한인 실태조사 제언

조사자	주요 제안
오정은 외. 2015.	►귀환법, 조례제정 ►다른 이주민, 주민과의 교류 기회 제공 ►봉사활동 ►복지관, 교회 활용 이웃 만들기 ►고려인의 날 같은 문화 체육 행사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지역 내 문화예술 역사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임채완 외. 2014.	►법제정비 : 개념정의, 사증제도개선, 정책추진체계 확립 ►생활안정 : 정기적 실태조사, 밀집지역환경개선,고려인가정지원사업 도입 ►역량강화 : 자조단체 활동지원, 유학생 활용 강화, 한국과 CIS를 오가는 고려인 활동지원, 중앙아시아 개발을 위한 이주프로그램 도입 등

CWPDI 13

고려인/사할린 한인 실태조사 현황

❖(지방정부) 고려인 일반 및 사할린 한인 실태조사

- **2010년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수행된 고려인 및 사할린 한인 관련 실질적 실태조사는 3건**
- **사할린 한인 1건(2013), 고려인 2건(2019,2020)**

지역	조사명	연구기관
충남	충청남도 영주귀국사할린한인의 지역사회 정착실태 및 지원방안(2013.08)	우복남.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경기	경기도 거주 고려인 생활실태 및 정착방안(2019.12)	최영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인천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실태조사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방안 -고려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2020.08.)	양수진외. 인천여성가족재단

CWPDI 14

고려인/사할린 한인 실태조사 현황

❖(지방정부) 경기도 고려인 실태조사 주요 결과

경기도 거주 고려인 생활실태 및 정착방안(2019)

- 92.5%가 월세 거주
-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빈곤을 경험한 경우는 28.9%,
- 전기, 수도, 전화비 등 공과금을 밀린 경험은 25.1%
- 지역이나 직장 건강보험 개인 의료보험,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조합 등 아무것도 없다가 10.7%
-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는 16.4%이며, 의사소통 어려움이 2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병원 운영 시간에 맞추기 어려워서 19.4%, 병원비가 비싸서 16.1%, 건강보험 자격정지 혹은 상실 6.5% 순
- 한국어 수준의 경우 읽기 65.8%, 말하기 64%, 쓰기 76.4%, 듣기 66.6%가 전혀 못하거나 못 하는 편인 것으로 응답
- 지역 주민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 수준의 경우, 고려인 중심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작동(선주민과 이주민 연결망은 약한 편)
- 동포 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차별 경험은 29.4%(차별 상황은 취업 시 33.3%, 직장 28.1%, 거리 혹은 공공장소 10.5%, 상점 혹은 식당 9.6%)
- 주요 어려움은 언어 문제 64.3%, 경제활동 기회 획득 4.5%, 동포(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4.0% 순

CWPDI 15

고려인/사할린 한인 실태조사 현황

❖(지방정부) 경기도 고려인 실태조사 결과 정책제언

경기도 거주 고려인 생활실태 및 정착방안(2019)

►법 및 조례 개정

- 고려인동포법 개정
- 경기도 고려인주민 지원조례 개정

►통합된 생활공간 조성

- 연계사업 강화(고려인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공간제공)
- 마을공동체사업 등 지역사업 테마 다양화 (고려인과 함께하는 아리랑 활성화)

►고려인을 향한 역사적 책임 의식 고취

- (가칭) 경기도 동포문화관 설립
- 고려인과 경기도민이 함께하는 역사탐방 교육

►고려인 특화사업(단기)

- 세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 러시아어 통번역사 배치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사업발굴(장기)

- 한국어교육/통번역지원 통합운영단
- 자녀 돌봄 및 교육지원
- 이주민 소외계층 의료지원

CWPDI 16

3. 고려인/사할린 한인 관련 법률 현황

고려인/사할린 한인 관련 법 현황

❖고려인 일반 및 사할린 한인/동포 관련 법 제/개정 현황(2021년 5월 9일 기준)

- 고려인 관련 법 1개, 사할린 한인 관련 법 1개, 총 2개의 법이 제정된 상태
- (국외거주)고려인동포법은 2010년 5월 제정
- (국내정착)사할린동포법은 2020년 5월 제정
- 오랜 강제 이주와 차별, 귀환 등 고난의 역사를 생각하면 늦게 만들어지고 내용도 부족한 법률

CWPDI 18

국가의 고려인 관련 법 현황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 2010)

- 명칭과 같이 한국 국내가 아닌 국외 정착 고려인 지원이 목적으로 총 8개 조항에 불과
- 소련방 해체, 독립국가연합 형성 등으로 인한 고려인의 국적, 체류자격 문제 관련
- 주로 외교부 소관, 재외동포재단 사업으로 진행

❖국내 정착 증가로 인해 이슈가 확산되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고려인 국내 정착지원 준비는 미비

CWPDI 19

국가의 사할린 한인 법 현황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0. 5. 26., 제정)

❖2020년 겨우 제정, 총 7조에 불과하고 많은 논란 유발

-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과 "동반가족"(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지원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 피해구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 주거지원 및 초기정착지원 등 명시
- 국내 정착한 사할린 한인 노부부의 동반가족의 범위를 제한하여 보편적 인권인 가족결합의 권리 제한, 가족이산 방치, 국민 보호 미흡 등 비판

CWPDI 20

4. 고려인/사할린 한인 관련 지자체 조례 현황

지자체 고려인 조례 현황

❖ (광역) 고려인 지원 조례 현황(2021.5.9)

▪ 광역 지자체 고려인 조례 제정은 6곳

- 광주(2013), 최초 제정
- 경기(2016), 2번째 제정
- 인천(2018), 3번째 제정
- 경북(2019),
- 경남(2020),
- 전북(2021) 올해 4월 제정

CWPDI 22

지자체 고려인 조례 현황

❖ (기초)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현황

- 기초 2곳 제정(2021.5.9)
- 기초 2곳 모두 경기도 (김포/안산)
- 김포시 2015제정, 경기 광역 보다 먼저 제정
  - 2020년 개정, 수당지급 위원회 내용만 변경
- 안산시 2018년 제정
  - 안산시 고려인주민 지원사업 확대 기반 마련

CWPDI 23

지자체 고려인 조례 현황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8개) 주요 내용

- '고려인 주민' 정의
-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한인]과 친족
- 지원의 대상
- 외국인 등록 or 합법체류 외국국적 취득자, 귀화 고려인과 그 자녀/배우자, 친인척

CWPDI 24

지자체 고려인 조례 현황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8개) 주요 내용

- 지원 내용 : 대부분 유사
- 실태조사 : 인천, 광주, 안산, 김포만 '고려인 주민 수 등' 조사 의무조항(고려인주민 수만 파악해도 되는 한계) => 현재 경기/인천만 고려인 생활실태조사, 광주는 도시재생사업 수행 안에서 부문적으로 조사
- 집중 거주 지역 주거환경 개선(경기, 경남, 광주 명시)
- 한국어 등 교육지원, 통 번역 등 편의제공
- 처우개선,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
- 모국 문화, 예술 문화 활동, 의료지원
- 지원센터 운영, 고려인 단체 지원 및 지원 단체의 지원
- 자녀 돌봄, 영유아 보육지원

CWPDI 25

지자체 고려인 조례 현황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8개) 주요 내용

-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명시한 곳은 3개
  - 모두 광역 : 광주, 인천, 전북
- 고려인 주민 지원위원회 설치 명시는 3개
  - 기초 2(김포, 안산)
  - 광역 1(인천)
- 고려인 주민 경제적 자립/취·창업 지원 명시 6개
  - 모두 광역: 경기, 경남, 경북, 광주, 인천, 전북

CWPDI 26

지자체 사할린 한인 조례 현황

❖ (광역 2곳) 사할린 한인 조례 제/개정 현황

▪ 광역 2곳에서 사할린 한인 조례 제정(충청)

▪ 2021.5.9.기준

- 충남도(2014.09.제정, 전국 최초, 20년 개정)
- 충북도(2016년 제정)

CWPDI 27

지자체 사할린 한인 조례 현황

❖ (기초 9곳) 사할린 한인 조례 제/개정 현황

- 인천 2(남동구 2014.11.제정, 기초 최초/2020개정, 서구 2016제정/2020개정)
- 충북 2(제천 2015제정, 음성 2019제정)
- 충남 2(서천 2016제정/2020개정, 아산 2016제정)
- 경남 1(김해 2019제정)
- 경기 1(오산 2020제정)
- 부산 1(기장군 2021.5. 올해 제정)

CWPDI 28

지자체 사할린 한인 조례 현황(2021.5.9)

❖사할린 한인 지원 조례(11개) 주요 내용

- 사업대상 :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사업에 따른 사업으로 지역에 정착한 사할린 한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이며, 해당 지자체 주소를 두는/거주하는 조건
- 지역에 따라 지칭 용어 다양
- 영주귀국주민 1세[충북]

  vs. 영주귀국주민 1세와 2세[충남]

  vs. 1세대[인천 서구]

CWPDI 29

지자체 사할린 한인 조례 현황

❖11개 조례의 지원내용은 대체로 유사

- 한국어, 통번역 등 언어소통 지원
- 일반주민 관심, 일반주민과 교류, 건강문화체육
- 후세대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 국내 타지역 친인척 교류
- 친족교류 위한 사할린/독립국가연합 국가 왕복 지원 : 사할린[충북], 사할린 등[인천서구], 독립국가연합 [충남:2020개정으로 CIS 방문시 항공료지원].
- 실태조사는 충남, 충북, 김해 명시, 다만 임의 조항
- 그 외: 충북은 장례지원항목 포함

CWPDI 30

5. 지자체 고려인 주민 지원 정책 사례

지자체 고려인 지원 사례

❖ 경기도

- 고려인 포함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확대
-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 관련 최근 경기도의 변화 중 하나는 **동포, 특히 고려인동포 관련사업 확대**
- 일자리, 주택, 언어소통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일정 지역 집중 거주 양상을 보이는 고려인 동포는 일제강점기 역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특별한 정책적 접근 시도

CWPDI 32

지자체 고려인 지원 사례

❖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땟골)

- 경기도 안산시에는 상당수 '동포' 이주민들이 거주, **2017년부터 동포 인식개선 사업 등 진행**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재한동포팀**')
- 경기도청 역시 **2019년 외국인정책과 조직 신설**과 더불어 안산시의 고려인 마을 지원
  (고려인 동포 이해, 인식개선사업 지원 등)
-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사단법인 *너머* 위탁)**

CWPDI 33

지자체 고려인 지원 사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 민간, 지자체 협업으로 사업 확대 중
- 고려인 한국어교육, 아동돌봄 등 정착지원사업
- 선주민의 이주민 고려인 이해 사업, 선주민과 이주민 교류 사업
-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도시재생, 생활 SOC 등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 활용)

CWPDI 34

6. 충남의 고려인 주민 지원 제도 모색

충남 고려인 지원 제도 모색

❖기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 (방안 1)

- 경기도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등 참조 가능
- 외국인주민 중 동포 누락 방지 위해 동포 명시
- 보육, 돌봄, 보건 등 현행 조례개정 고려
- 장점 : 중국계동포와의 형평성, '동포' 이외 외국인주민 포용성 확보(인권/평등/통합 지향)
- 단점 : 정책홍보 불리, 현 조직/전달체계 한계 등

CWPDI 36

충남 고려인 지원 제도 모색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 (방안 2)

- 타 지자체 조례 참조 가능
- 밀집 거주 지역 고려인주민/가족/자녀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통한 지원 가능
- 장점 : 고려인 특성에 맞는 지원, 일제강점기 민족/가족 이산, 강제이주 등 역사적 문제 해결 등
- 단점 : 다른 동포('조선족'), 외국인주민 차별 무려, 조례 제정과 소관 부서 지정, 예산 어려움 등

CWPDI 37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CWPDI

지역 고려인 노동 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

류 민 |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

지역 고려인 노동 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

충청남도의회 의정토론회 × 다른 내:일 포럼 2021-③

지역 고려인 이주 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

2021년 5월 25일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류민 정책기획팀장

실태조사 개요	연구 배경과 내용
노동권 실태조사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주 경로와 동기 고용 형태와 구직 경로 근로 계약 노동 조건 노동 안전 코로나 19 노동 인권 침해 지역사회 지원 경험
지역사회의 과제	지역 고려인 지원 제도 모색

지역 고려인 노동권 실태조사 개요

지역 고려인 노동 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

03

지역 고려인 노동권 실태조사 개요

연구 배경

한국사회로 (귀환) 이주하는 고려인들은 뚜렷이 증가,
법무부 출입국 통계(2020.04)를 분석한 사단법인 너머의 자료에
따르면, **약 8만 5천명 이상의 고려인들이 국내에 거주**

충남지역에도 약 1만 5천명 이상의 고려인들이 생활,
전국 고려인의 18% 수준
특히 **아산시는 전국에서 경기도 안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기초단체로 추정

고려인 인구 수가 많은 순서대로 도내 시군들을 나열해보면
아산, 천안, 서산, 당진, 논산, 홍성 순 (고려인 100명 이상 거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거주지역이 빠르게 형성
아산의 신창면, 당진의 합덕읍, 홍성 내포의 오피스텔 밀집지역
등이 대표적인 거점들

04

지역 고려인 노동권 실태조사 개요

연구 배경

고려인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주의 가장 큰 동기는 '노동', **더 나은 일과 삶을 위해**
한국사회로 (귀환) 이주를 선택
그러나 한국사회로 이주한 고려인들 다수가 마주한 노동현실은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톱니바퀴

지역 이주민 & 이주노동지원단체 고려인 관련 상담 증가,
아산이주노동자센터의 2019년 전체 상담 중 1/3 이상이
고려인으로 추정되는 구 소련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상담으로
임금체불, 무허가 직업소개업자들의 취업 사기 사례 다수 확인

2018년 예산군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고려인 청년 노동자가
운송장치와 철기둥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는 등 안전 문제도 심각

05

지역 고려인 노동권 실태조사 개요

연구 방법

충남지역의 경우, 지역 고려인 관련 선행 연구를 찾기 어려운 현실,
전국의 경우에도 고려인의 '노동권' 문제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 **고려인 이주노동자가 마주한 현실에서 출발한**
대안 모색을 위해 실태조사를 기획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당진역사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고려인을 비롯한 지역 활동가들과 협업을 통해 연구 진행

2020년 10월 부터 2020년 12월 까지,
법무부 통계 기준, 100명 이상의 고려인들이 정주하고 있는
아산/천안/서산/당진/논산/홍성/예산지역의 고려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총 229명의 응답안을 분석**,
20명의 고려인들과 심층면접을 진행

06

지역 고려인 노동권 실태조사 개요

연구 내용

이주 경로와 동기 | 태어난 나라와 현재 국적, 체류 자격, 거주 기간, 거주 지역과 사업장 소재지, 이주 동기

고용 형태와 구직 경로 | 하는 일, 고용 형태, 근무 기간, 사업장 규모, 구직 경로와 비용, 간접 고용 구조 등

근로 계약 | 근로계약 체결의 유형, 근로계약서 작성 및 수령 여부, 근로 계약의 이해

노동 조건 | 근로 시간, 임금 수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노동 안전 | 산업재해 경험, 의료 접근성, 사업장 위험도, 안전교육 경험과 이해

코로나19 | 코로나19 영향, 사업장 감염 위험도, 방역 조치, 감염 예방 교육 경험과 이해

노동인권 침해 | 노동인권 침해 경험과 대응

지원 경험 | 충남지역 생활 문제, 지역사회 지원 경험

기타 | 주거 형태, 한국어 실력, 인구통계학적 특성

07

노동권 실태조사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지역 고려인 노동 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

노동권 실태조사 결과

08

연령대	만 나이	빈도	비율
20대	20 - 29	35	15.7 %
30대	30 - 39	79	35.4 %
40대	40 - 49	82	36.8 %
50대	50 - 59	18	8.1 %
60대	60 - 69	9	4.0 %
유효 합계		223	100.0 %
무응답		6	
총계		229	

09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대

조사일 기준 응답자의 만 나이
평균 39.1세
최소 20세 - 최대 67세

30대와 40대가 무응답을 제외한
전체 응답자의 72.2%를 차지

법적 성별	빈도	비율
여성	94	41.8 %
남성	131	58.2 %
유효 합계	225	100.0 %
무응답	4	
총계	229	

10

인구통계학적 특성

법적 성별

실태조사 응답자의 법적 성별 (여권 등
행정기록상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무응답을 제외한 전체 응답자의
58.2%를 차지

최종 학력	빈도	비율
없음	1	0.4 %
중학교	11	4.9 %
고등학교	65	28.9 %
전문대학	67	29.8 %
일반대학	76	33.8 %
대학원	5	2.2 %
유효 합계	225	100.0 %
무응답	4	
총계	229	

11

인구통계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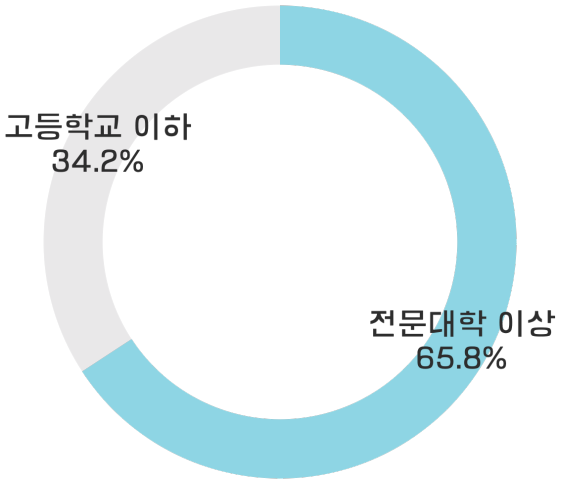
최종 학력

응답자의 최종 학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대학 입학 이상 졸업 이하가 33.8%**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학 입학 이상 졸업 이하가 29.8%**로 다음으로 많았음

인구통계학적 특성

최종 학력

최종 학력의 세부 유형을 다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기준으로 재분류,
무응답을 제외한 **전체 응답자의 65.8%는 전문대학 이상의 고학력**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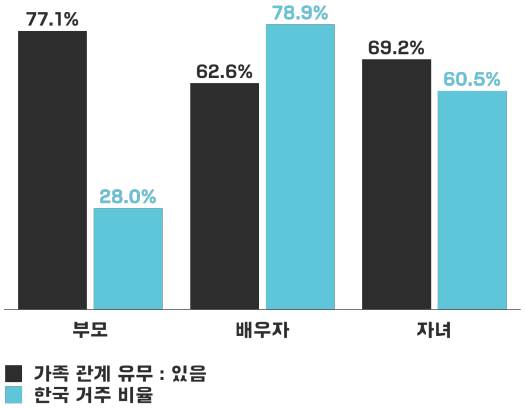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족 관계

질문의 응답자 중 **77.1%가 부모가 있다**고 답했고,
그중 **28.0%는 부모의 일부, 혹은 전원이 한국에 거주**

62.6%는 배우자가 있다고 답했고,
그중 **78.9%는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

69.2%가 자녀가 있다고 답했고,
그중 **60.5%는 자녀의 일부, 혹은 전원이 한국에 거주**



13

부모/배우자/자녀 한국 거주	빈도	비율
모두 타국 거주	66	30.0 %
일부 한국 거주	134	60.9 %
모두 한국 거주	20	9.1 %
유효 합계	220	100.0 %
모두 없음	7	
무응답	2	
총계	229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족 관계

부모/배우자/자녀가 한 사람이라도
생존해있는 응답자의 **70.0%는**
부모/배우자/자녀 중 1인 이상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 모두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는
9.1%로 나타났다.

가족 단위 이주와 정주를 지향하는
고려인 이주 특성을 드러내는 지표

14

함께 사는 가족 수 (본인 포함)	빈도	비율
1	81	35.8 %
2	51	22.6 %
3	43	19.0 %
4	31	13.7 %
5	15	6.6 %
6	3	1.3 %
8	2	0.9 %
유효 합계	226	100.0 %
무응답	3	
총계	229	

15

인구통계학적 특성

함께 사는 가족

본인을 포함하여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의 수는 평균 2.41명**으로 최소 1명, 최대 8명

64.2%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생활, 홀로 생활하는 응답자는 35.8%

함께 사는 가족 중 경제활동 수	빈도	비율
1	123	54.4 %
2	83	36.7 %
3	19	8.4 %
4	1	0.4 %
유효 합계	226	100.0 %
무응답	3	
총계	229	

16

인구통계학적 특성

함께 사는 가족 : 경제활동

이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족의 수는 최소 1명, 최대 4명, 평균 1.55명

홀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54.4%로 가장 많았고,
본인을 포함해 **2인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45.6%**

한국 국적이 없는 18세 미만 아동 수	빈도	비율
0	148	66.4 %
1	34	15.2 %
2	32	14.3 %
3	6	2.7 %
4	3	1.4 %
유효 합계	223	100.0 %
무응답	6	
총계	22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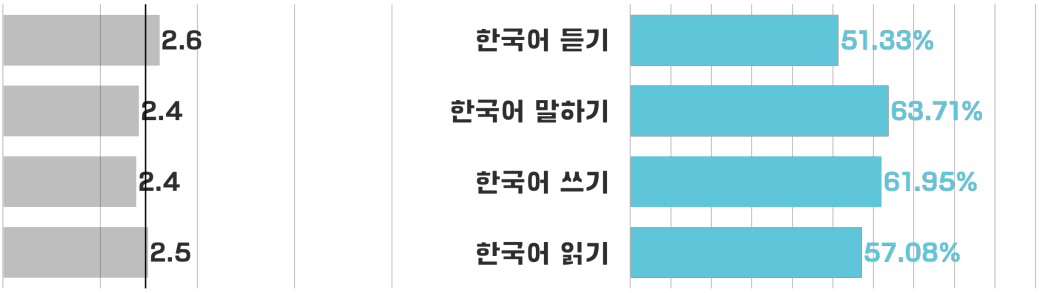
인구통계학적 특성

함께 사는 가족 : 18세 미만 아동

한국 국적이 없는
18세 미만 아동의 수는 평균 0.57명,
최소 0명, 최대 4명

1명 이상의 한국 국적이 없는 18세 미만 아동과 살고 있는 경우가 33.6%

한국어 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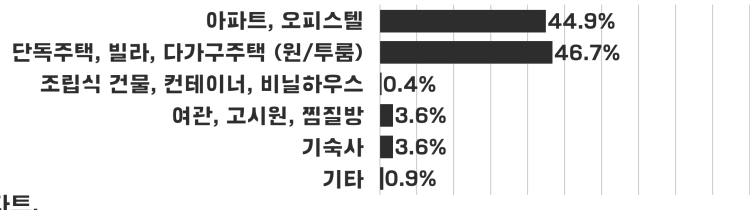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5점 척도, 문항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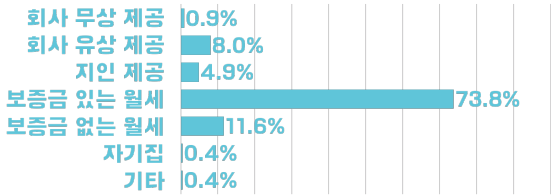
'나는 한국어를 듣고/말하고/읽고/쓸 수 있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

18

거주 형태



주거권 현실을 살펴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아파트,**
오피스텔 혹은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 주택의 유형이 가장 많았다.



73.8%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
자기집은 0.4%에 불과,
전세라는 응답은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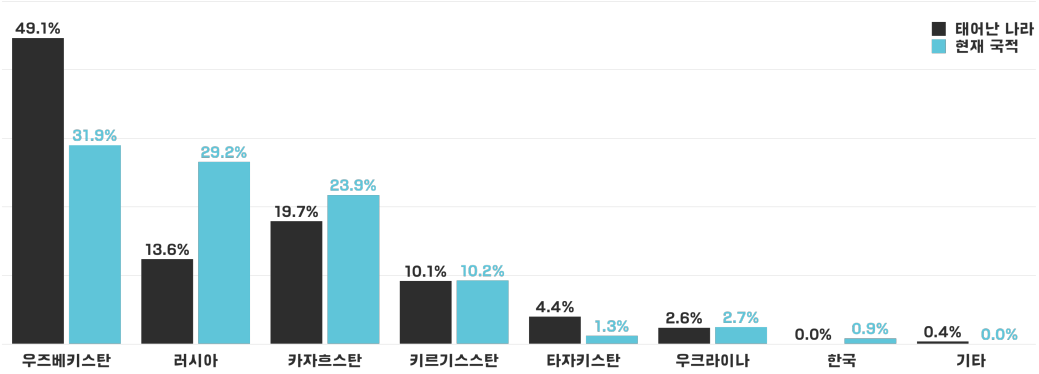
19

이주 경로와 동기

지역 고려인 노동 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
노동권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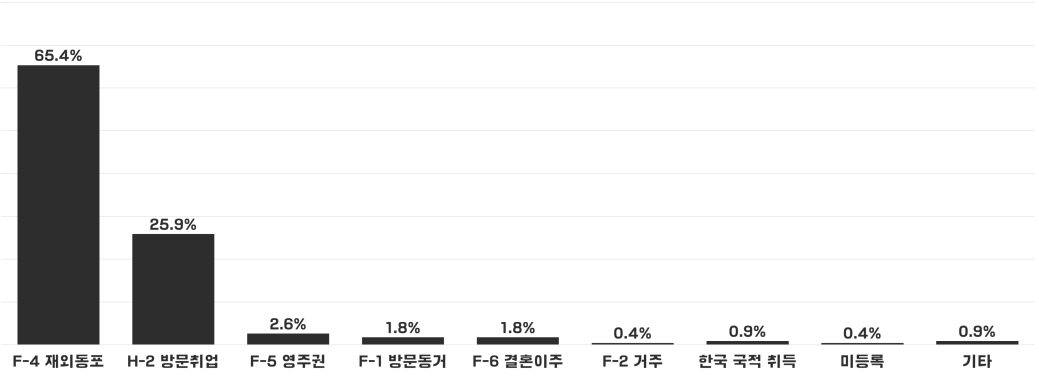
20

태어난 나라와 현재 국적 이주 경로와 동기



21

체류 자격 이주 경로와 동기



22

거주 기간 이주 경로와 동기

23

거주 기간 (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유효 합계	무응답	총계
한국 거주 기간	0.1	20	4.56	3.12	229	0	229
충남 거주 기간	0.1	17	3.46	2.62	228	1	229
한국 / 충남 거주 기간 차이	0	10	1.11	1.93	228	1	229

한국 거주 기간	빈도	비율
2년 미만	35	15.3 %
2년 이상 5년 미만	107	46.7 %
5년 이상 10년 미만	71	31.0 %
10년 이상	16	7.0 %
유효 합계	229	100.0 %
무응답	0	
총계	229	

충남 거주 기간	빈도	비율
2년 미만	68	29.8 %
2년 이상 5년 미만	105	46.1 %
5년 이상 10년 미만	47	20.6 %
10년 이상	8	3.5 %
유효 합계	228	100.0 %
무응답	1	
총계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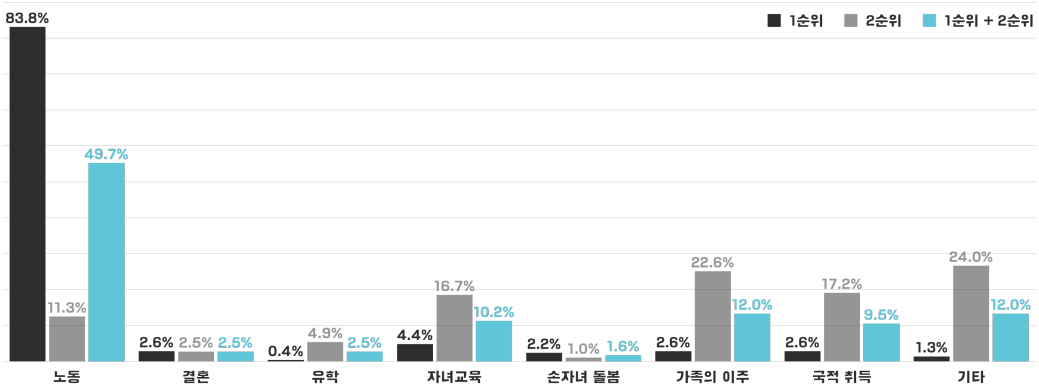
지역 이주 경로와 동기

거주 지역	빈도	비율
아산시	75	33.0 %
홍성군	33	14.5 %
천안시	31	13.7 %
예산군	28	12.3 %
서산시	26	11.5 %
당진시	19	8.4 %
논산시	15	6.6 %
유효 합계	227	100.0 %
무응답	2	
총계	229	

사업장 소재지	빈도	비율
아산시	73	32.0 %
예산군	45	19.7 %
천안시	33	14.5 %
서산시	27	11.8 %
당진시	17	7.5 %
홍성군	17	7.5 %
논산시	15	6.6 %
청양군	1	0.4 %
유효 합계	228	100.0 %
무응답	1	
총계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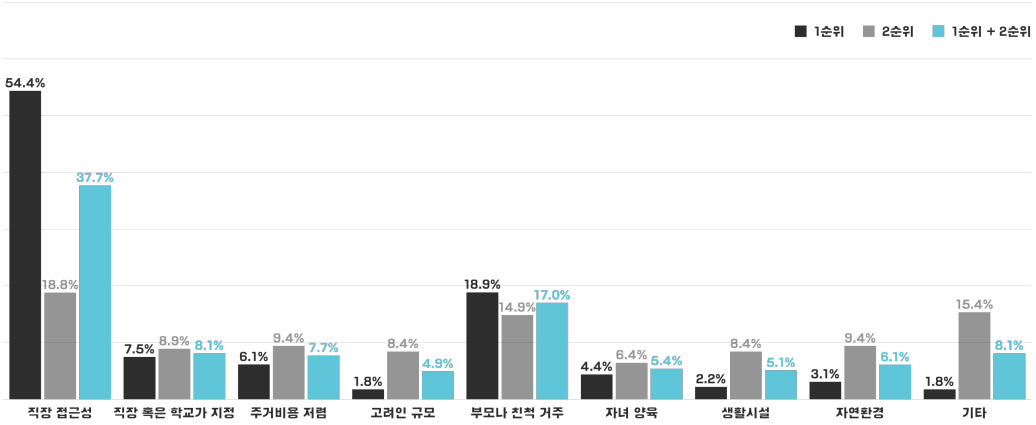
24

이주 동기 : 한국 이주 경로와 동기



25

이주 동기 : 충남 이주 경로와 동기



26

고용 형태와 구직 경로

지역 고려인 노동 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

노동권 실태조사 결과

27

현재 하고 있는 일	빈도	비율
제조업 공장 노동자	183	79.9 %
기타	15	6.6 %
건설 노동자	7	3.1 %
서비스/판매 노동자 (마트, 편의점, 관광 가이드 등)	7	3.1 %
숙박음식업 노동자 (여관, 식당 주방/서빙 등)	5	2.2 %
농림/축산업 노동자	4	1.7 %
민간 기업 사무직 노동자	4	1.7 %
가사 관련 노동자 (가정부, 파출부, 보육사 등)	3	1.3 %
어업/수산업 노동자	1	0.4 %
유효 합계	229	100.0 %
무응답	0	
총계	229	

28

고용 형태와 구직 경로

하는 일

조사일 기준 응답자가 하고 있는 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공장 노동자가 79.9%**로 가장 많았다.

기타를 제외하면, **건설 노동자**와 **서비스/판매 노동자**가 각각 **3.1%**를 차지, 두 번째로 많았다.

고용 형태	빈도	비율
정규직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102	45.5 %
기간제 계약직 (근로 기간에 정함이 있는)	56	25.0 %
일용직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36	16.1 %
시간제 (파트타임) / 아르바이트	30	13.4 %
유효 합계	224	100.0 %
무응답	5	
총계	229	

29

고용 형태와 구직 경로

고용 형태

현재 고용 형태의 세부 유형별 응답은 정규직이 45.5%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를 정규직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 노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54.5%가 기간에 정함이 있는 비정규,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근무 기간	빈도	비율
1년 미만	99	46.0 %
1년 이상 3년 미만	72	33.5 %
3년 이상 5년 미만	30	14.0 %
5년 이상 10년 미만	14	6.5 %
유효 합계	215	100.0 %
무응답	14	
총계	229	

30

고용 형태와 구직 경로

근무 기간

근무 기간의 경우
최소 0.1년에서 최대 14.8년,
평균 1.8년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이 46.0%로 가장 많았고,
3년 미만이 전체 응답의 79.5%를
차지하고 있다.
불안정 노동의 현실을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

노동자 수	빈도	비율
1 - 4명	18	8.0 %
5 - 9명	24	10.7 %
10명 - 29명	63	28.0 %
30 - 299명	108	48.0 %
300 명 이상	12	5.3 %
유효 합계	225	100.0 %
무응답	14	
총계	229	

31

고용 형태와 구직 경로

사업장 규모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 수를 살펴보면
30명 이상 299명 이하가 48.0%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94.7%가 30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
30미만 사업장이 46.7%를 차지

이주노동자의 규모는 평균 47.7명,
최소 1명에서 최대 400명

구직 경로	빈도	비율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	3	1.3 %
직업소개소, 인력사무소 등 사설 업체	27	11.9 %
비공식 브로커	31	13.7 %
친구/친지 등 아는 사람	137	60.6 %
이주민/동포 지원단체	1	0.4 %
구인 광고	11	4.9 %
공개 채용 (산업연수생, 연수취업자)	5	2.2 %
학교, 학원	2	0.9 %
기타	9	4.0 %
유효 합계	226	100.0 %
무응답	3	
총계	229	

32

고용 형태와 구직 경로

구직 경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구한
경로를 살펴보면
친구/친지 등 아는 사람을 통한 구직이
60.6%로 가장 많았고,
사설 업체와 비공식 브로커에 의한
구직이 25.6%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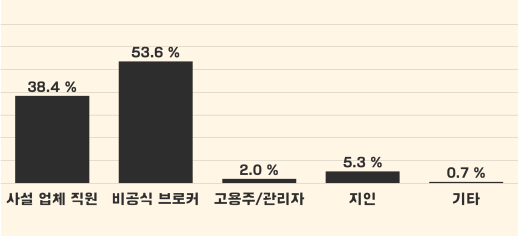
고용 형태와 구직 경로

소개비 지불 경험

응답자의 **58.9%가 구직 과정에서 소개비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소개비를 지불한 대상은 **비공식 브로커가 53.6%**로 가장 많았고, 사설 업체 직원이 38.4%를 차지

소개비 지불 경험	빈도	비율
있음	132	58.9 %
없음	92	41.1 %
유효 합계	224	100.0 %
무응답	5	
총계	229	



33

소개비	빈도	비율
10만원 미만	7	5.5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64	50.0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	39.1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6	4.7 %
100만원 이상	1	0.8 %
유효 합계	128	100.0 %
무응답	4	
총계	132	

고용 형태와 구직 경로

소개비

충남지역에서 **일을 소개받는 대가로 한 건에 지불한 최대 금액**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백만원으로 **평균 196,563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50.0%**로 가장 많았고,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9.1%로 다음을 차지했다.

34

근로 계약

지역 고려인 노동 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

노동권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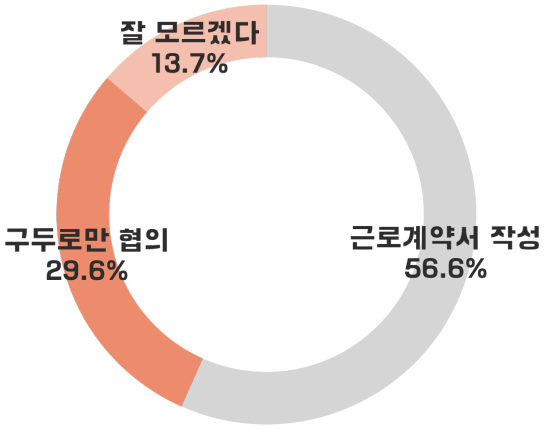
35

근로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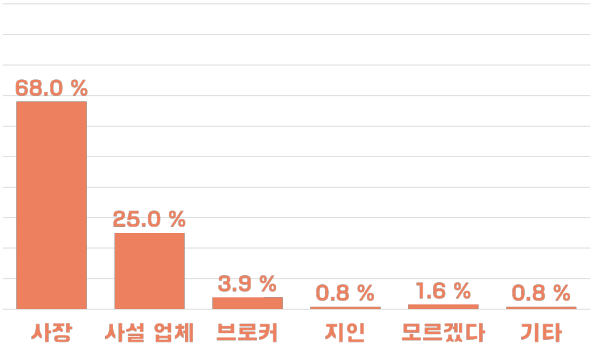
근로계약서 작성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한 유형에 대해 질문했을 때
56.6%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구두로만 협의 (29.6%)하거나 잘 모르겠다
(13.7%)는 응답자를 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응답자가
43.4%를 차지



36



근로 계약

근로 계약의 상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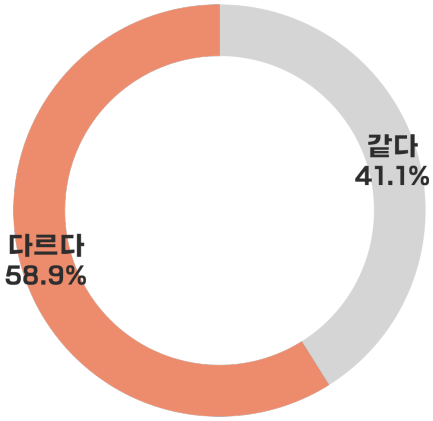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근로계약서 상 상대방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의 사장이** 68.0% 로 가장 많았다.

사설 직업소개업체와 브로커, 지인이 상대방인 경우를 합하면 응답자의 **29.7%는 간접 고용 노동자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7

사업주와 지급처	빈도	비율
같다	92	41.1 %
다르다	132	58.9 %
유효 합계	224	100.0 %
무응답	5	
총계	229	

그런데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의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사업주**와 같은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58.9%가 다르다**고 답했다. 앞서 근로 계약 문항에서 추정한 것보다 **실제 간접 고용의 비율은 더 높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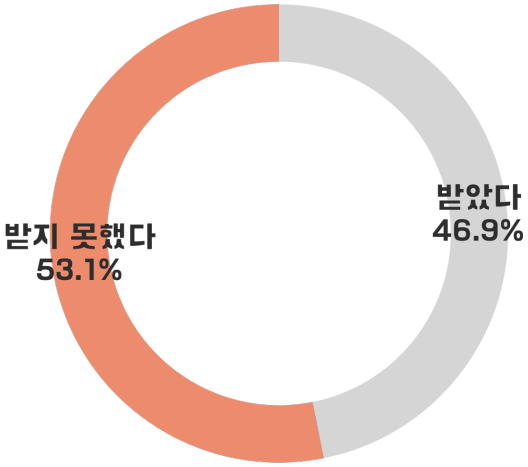


38

근로 계약

근로계약서 수령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표기한 응답자의
근로계약서 수령 여부를 살펴보면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53.1% 로 나타났다.
받았다는 응답자는 46.6% 로
응답자의 절반에 이르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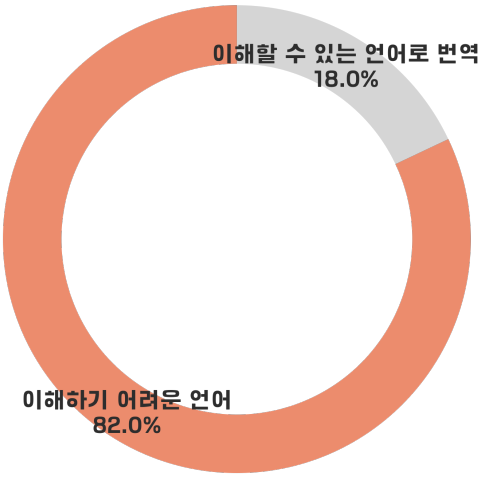


39

근로 계약

근로계약서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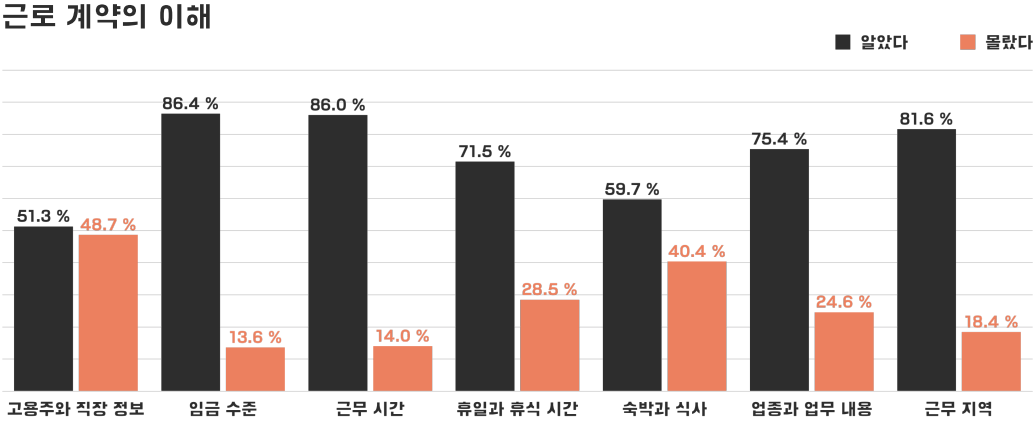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표기한 응답자 중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8.0%에 불과,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로 작성한 경우가
응답자의 82.0%를 차지



40

근로 계약

근로 계약의 이해



41

노동 조건

지역 고려인 노동 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

노동권 실태조사 결과

42

주당 노동시간	빈도	비율(무응답 제외)	비율 (전체)
40시간 미만	14	6.2 %	6.1 %
40시간	58	25.6 %	25.3 %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	65	28.6 %	28.4 %
52시간 초과 68시간 이하	76	33.5 %	33.2 %
68시간 초과	14	6.2 %	6.1 %
유효 합계	227	100.0 %	99.1 %
무응답	2		0.9 %
총계	229		100.0 %

43

노동 조건

주당 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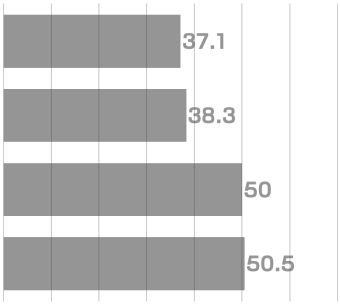
응답자의 주당 노동시간을
구간별로 산출하면
52시간 초과 68시간 이하가
33.2%로 가장 많았다.

연장 근로를 포함한
법정 기준인 **52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38.3%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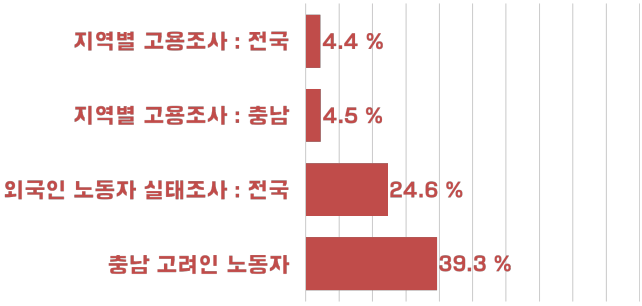
주당 노동시간 : 비교

노동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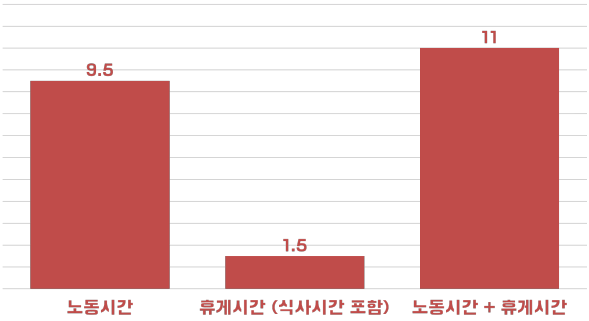
주당 노동시간 평균



주당 노동시간 52시간 초과 비율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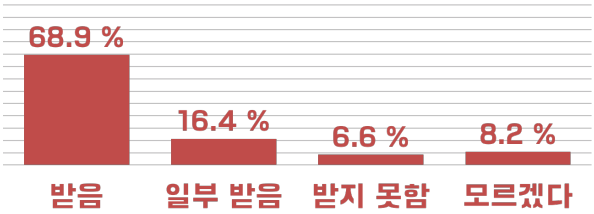
노동 조건

하루 평균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5시간,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1.5시간으로
하루 평균 11시간을
일하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45

월 평균 연장 / 야간근로 (일)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연장근무	1	30	10.8	8.3
야간근로	1	25	11.2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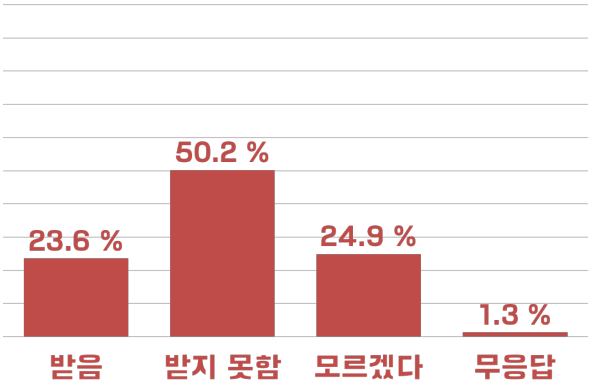
노동 조건

연장 및 야간근로

월 평균 연장 혹은 야간근로일의
수를 살펴보면
연장근무는 평균 10.8일,
야간근로는 평균 11.2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23.0%는**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46



47

노동 조건

연차휴가 / 수당

연차휴가 혹은 수당을 받고 있는지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의 23.6%만 받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연차휴가 /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상황**

월 평균임금 (공제 전)	빈도	비율
50만원 미만	4	1.8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1.3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4	6.3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0	17.9 %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72	32.3 %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55	24.7 %
3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32	14.3 %
350만원 이상	3	1.3 %
유효 합계	223	100.0 %
무응답	6	
총계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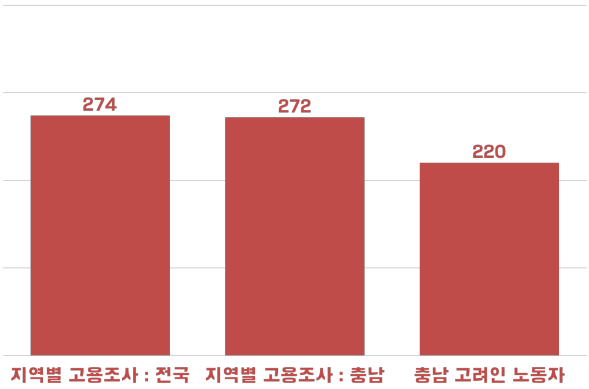
48

노동 조건

월 평균임금

공제 전 월 평균임금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이 **32.3%**로 가장 많았다.

한편,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응답자도 27.3%**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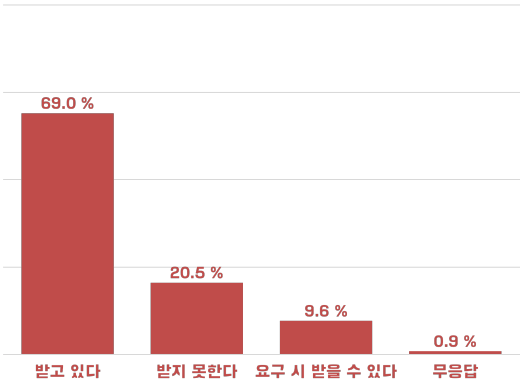
49

노동 조건

월 평균임금 : 비교

응답자의 공제 전 월 평균임금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360만원으로
평균 2,199,562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2020년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지역 고려인들의 월 평균임금이
50만원 이상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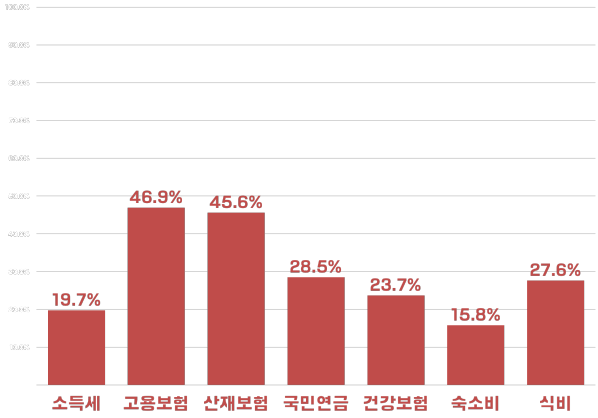
노동 조건

임금명세서

임금을 받을 때, 임금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나 증빙서를 받고 있는지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의 69%가 받고 있다고
답했다.

받지 못한다는 응답과 받고 있지 않지만
요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을 합산하면
30.1%는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상황

임금 공제 항목별 '모르겠다'의 비율



51

노동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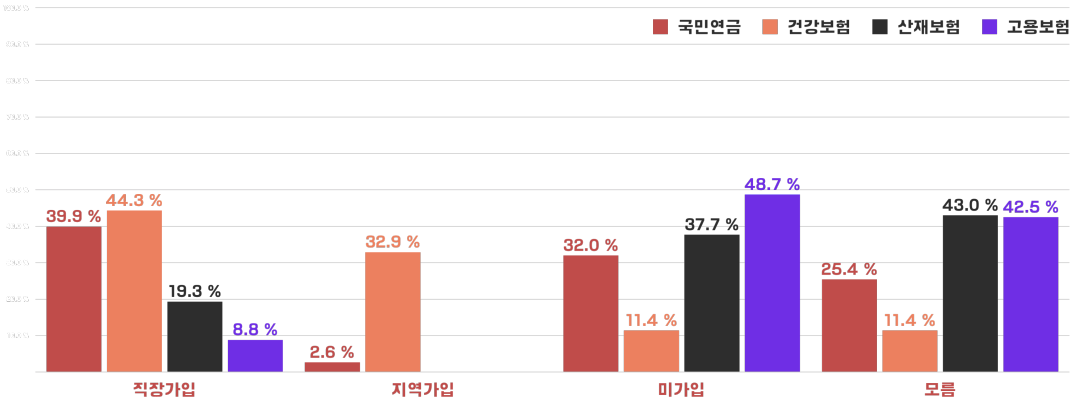
임금 내역의 이해

그런데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더라도
임금 내역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을 수 있다.

임금 공제 항목별 '모르겠다'의 비율을
살펴보면 **공제 항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응답자가 다수 존재**.
앞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여부와
연차휴가/수당 지급 여부를 물었을 때
모르겠다는 응답자 각각 8.2%, 24.9%
나타났다.

사회 보험 가입 노동 조건

2020년 외국인 임금노동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37.2%
산재보험 미가입자는 23.1% (2020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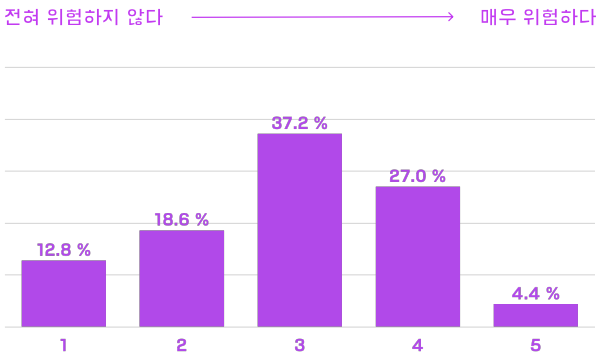
52

노동 안전

지역 고려인 노동 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

노동권 실태조사 결과

53



54

노동 안전

사업장 위험도

현재 일하고 있는 곳과 하는 일의 위험도를 5점 척도로 물었을 때, 평균 점수는 2.9점

구간별로 살펴보면
전혀 위험하지 않거나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31.4%,
4점 이상의 위험도를 표시한 응답자 역시 **31.4%**로 집계

산업재해 경험	빈도	비율
있다	75	33.6 %
없다	148	66.4 %
유효 합계	223	100.0 %
무응답	6	
총계	229	

지난 1년 사이에 작업중 다친 경험 19.8%
작업으로 인해 질병을 앓은 경험 15.3%
(2020년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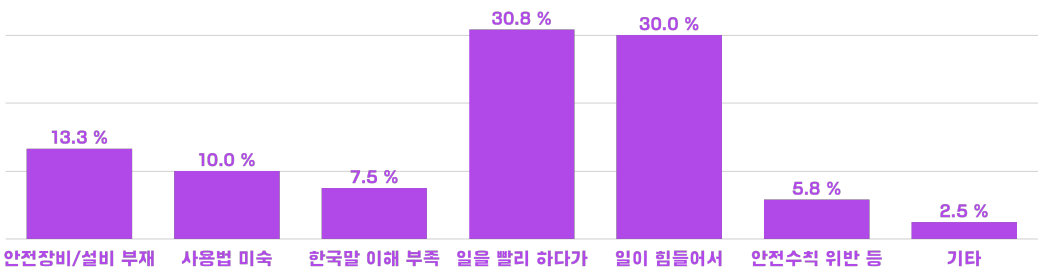
노동 안전

산업재해 경험

일을 하면서 다치거나
일 때문에 아픈 경험이 있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33.6%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노동 안전

산업재해 사유



56

산재보험 신청 여부	빈도	비율
신청	1	1.3 %
미신청	74	98.7 %
유효 합계	75	100.0 %
무응답	0	
총계	75	

노동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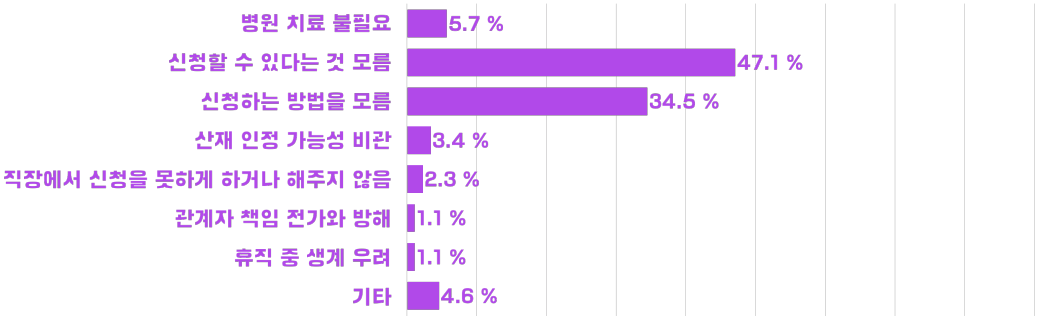
산재보험 신청 여부

일을 하면서 다치거나
일 때문에 아픈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98.7%가**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았다.

57

노동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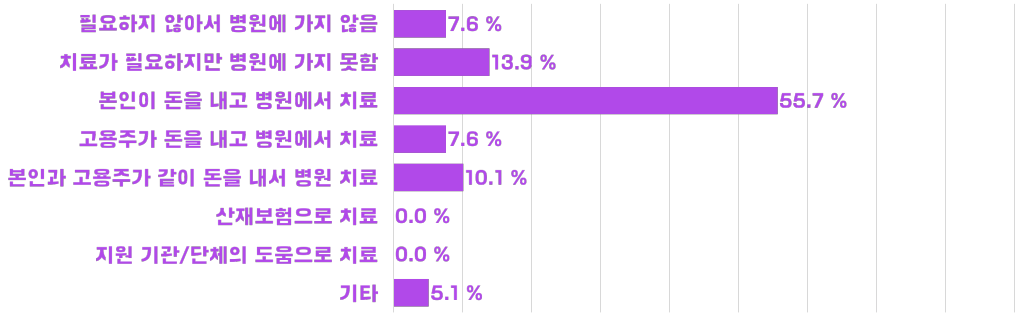
산재보험 미신청 사유



58

노동 안전

치료 여부와 치료비



59

노동 안전

의료 접근성

다치거나 아파서 치료가 필요하지만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을 한 응답자가 35.1%

가지 못한 이유로는
의사소통에 대한 우려가 31.6%로 가장
많았고, 시간 부족 (29.8%)과
치료 비용에 대한 우려 (21.9%)도
다수 존재

60

필요하나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빈도	비율
있다	79	35.1 %
없다	146	64.9 %
유효 합계	225	100.0 %
무응답	4	
총계	229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복수 응답)	빈도	비율
의사소통이 안될 것 같아서	36	31.6 %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34	29.8 %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25	21.9 %
어떻게 가야하는지 몰라서	11	9.6 %
고용주나 관리자가 보내주지 않아서	7	6.1 %
기타	1	0.9 %
유효 합계	114	100.0 %

노동 안전

안전 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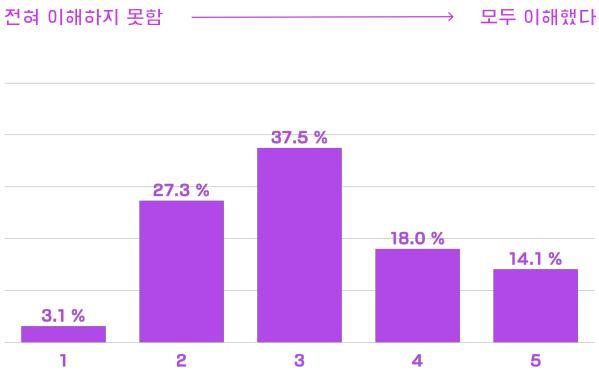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안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7.4%

모어 혹은 모국어로 진행된 교육을 받은 경험은 11.7%에 불과,
87.5%가 한국어로만 진행
안전 교육에 대한 이해를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

61

안전 교육 경험	빈도	비율
있다	128	57.4 %
없다	95	42.6 %
유효 합계	223	100.0 %
무응답	6	
총계	229	

안전 교육 언어	빈도	비율
한국어	112	87.5 %
한국어 + 모어 혹은 모국어	1	0.8 %
모어 혹은 모국어	14	10.9 %
기타	1	0.8 %
유효 합계	128	100.0 %
무응답	0	
총계	128	



62

노동 안전

안전 교육 이해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안전 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이해 정도를
5점 척도로 물었을 때, 평균 3.1점

구간별로 살펴보면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거의 이해하지 못한 응답자가
30.4%를 차지

코로나19

지역 고려인 노동 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

노동권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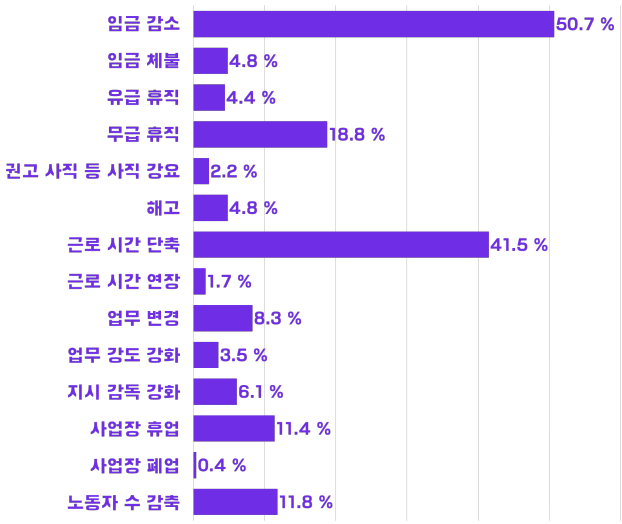
63

코로나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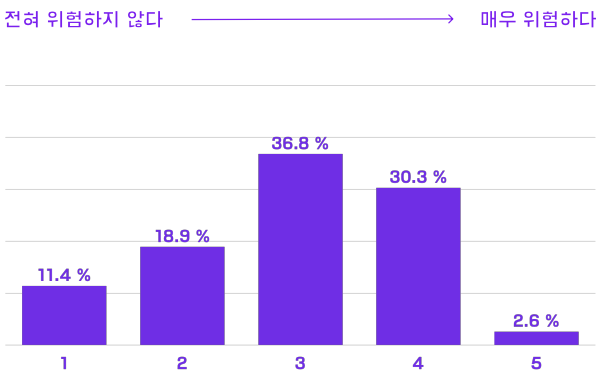
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가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율은 **전체 응답자의 95.7%**

이들의 복수 응답을 합산해보면
전체 응답자 중 50.7%가 코로나19로
임금 감소를 경험
월 평균 1,097,414원 감소



64



코로나19

사업장 감염 위험도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5점 척도로 물었을 때, 평균 점수는 2.9점

구간별로 살펴보면 **4점 이상의 위험도를 표시한 응답자가** 32.9%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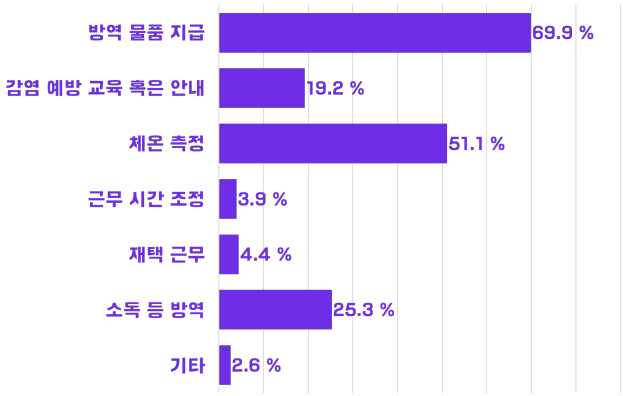
65

코로나19

사업장 방역 조치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1개 이상의 방역 조치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95.7%**

방역 물품 지급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방역 조치에 대한 경험 비율이 무척 낮은 수준**,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체온 측정도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



66

감염 예방 교육 언어	빈도	비율
한국어	39	88.6 %
한국어 + 모어 혹은 모국어	1	2.3 %
모어 혹은 모국어	3	6.8 %
기타	1	2.3 %
유효 합계	44	100.0 %
무응답	0	
총계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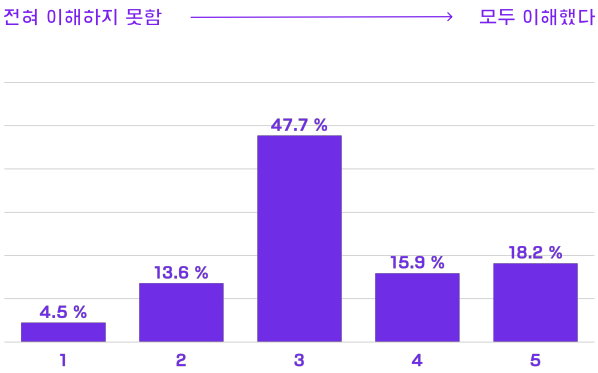
67

코로나19

감염 예방 교육 경험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교육이나 안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9.2%

그마저도 **이들 중 88.6%는 한국어로만 교육이나 안내가 이루어져** 이해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



68

코로나19

감염 예방 교육 이해

노동 인권 침해

지역 고려인 노동 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

노동권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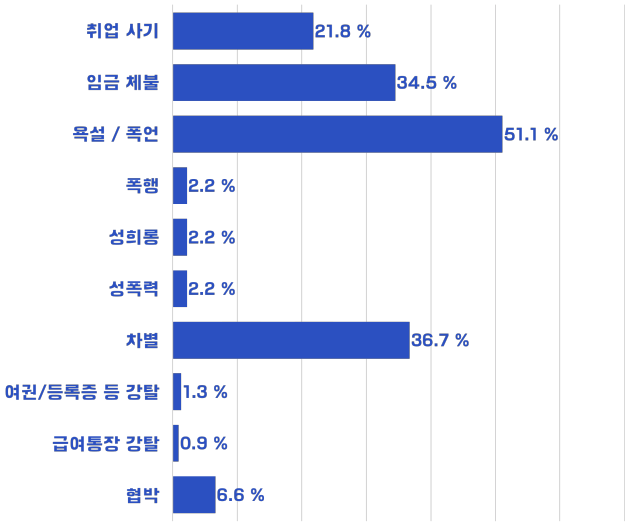
69

노동 인권 침해

노동 인권 침해 경험

전체 응답자의 65.9%가
1개 이상의 **노동 인권 침해를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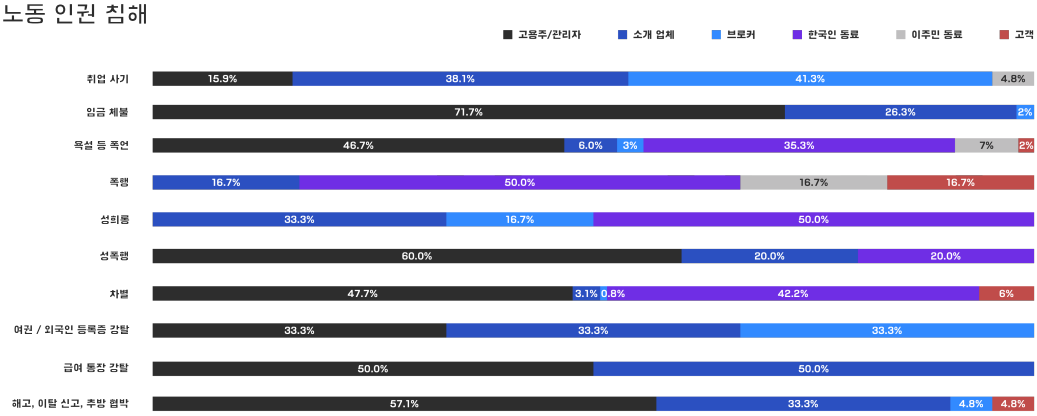
이들의 복수 응답을 합산해보면
전체 응답자 중 51.1%가 욕설 등 폭언을
36.7%가 차별을 경험
임금 체불 경험도 34.5%로
다수 존재



70

노동 인권 침해 경험 : 가해자

노동 인권 침해



71

전혀 도움안됨 ⟶ 매우 도움이 됨

노동 인권 침해 경험 : 대응

노동 인권 침해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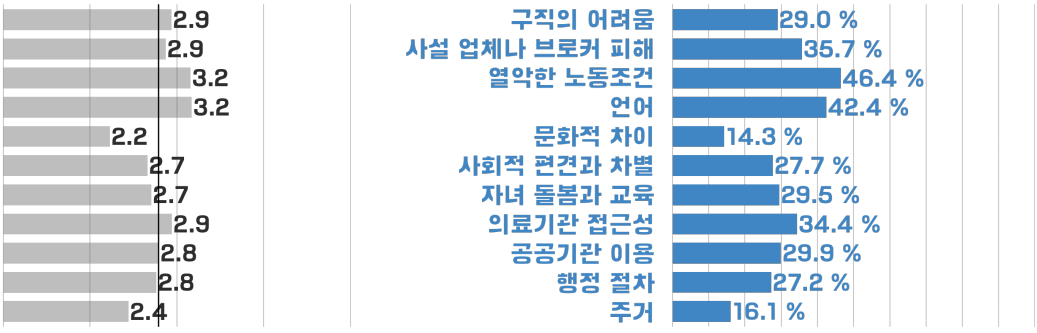
지원 경험

지역 고려인 노동 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

노동권 실태조사 결과

73

충남지역 생활 문제 심각도 지원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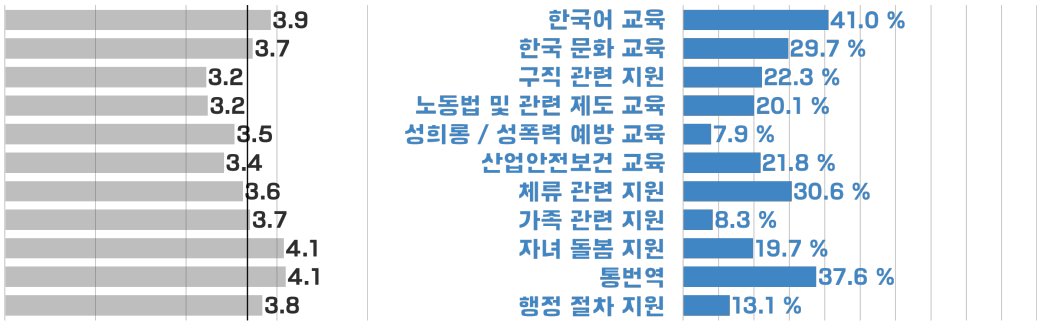


전혀 심각하지 않음 ⟶ 매우 심각

문제 유형별 4점 이상 답변 비율

74

문제 심각도 지원 경험



전혀 도움 안됨 ⟶ 매우 도움

전체 응답자 중 지원 경험 비율

전체 응답자의 62.4%가 1개 이상 지원 경험

75

지역사회의 과제

지역 고려인 노동 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

노동권 실태조사 결과

76

지역사회의 과제

이주노동 & 이주민 정책의 전환 혹은 재설계

고려인 (귀환) 이주민이 일과 삶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이주노동 & 이주민 관련 정책의 관점과
추진체계를 새롭게 전환하고 재설계할 필요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현황 12만 7057명 (전국 5위)
총인구대비 비율은 5.8%로 전국 1위
행정안전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20/11/19)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
2018년에 이미 외국인주민 비율이 5%를 넘어
다문화·다인종사회에 진입

77

지역사회의 과제

이주노동 & 이주민 정책의 전환 혹은 재설계

내국인과 외국인, 선주민과 이주민의 구분을 넘어서
국적과 인종에 따른 구분과 차별없이
지역주민 모두가 일과 삶의 존엄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설계, 중장기적 전략 과제의 일부로
고려인 이주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실행

현재 지역 이주민 지원 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
정책과 이주노동 정책이 분절되어 있는 양상

이주노동 정책은 이주노동자를 지역주민이 아닌
단기 생산 인력으로 바라보는 한계,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은 이주민의 노동 현실을
함께 살피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

78

지역사회의 과제

이주노동 & 이주민 정책의 전환 혹은 재설계

고려인을 비롯한 지역사회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주를 위해서는 노동, 가족 돌봄, 문화적응 등 현실의 여러 문제들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정책과 추진 체계가 필요

다문화정책협의회 등 기존의 협의체를 통한 논의와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이주민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통합형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

79

지역사회의 과제

고려인 맞춤형 지원

이주노동 & 이주민 정책의 주요 전략 과제로 설정, 지원 조례 제정, TF 등 전담 협의체계 구성, 실태조사와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등 고려인의 안정적인 정주를 위한 맞춤형 정책들을 실행

고려인의 이주 역사는 근현대사의 여러 비극들과 맞닿아 있음. 과거 국가 권력이 구성원의 일과 삶의 안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역사적 책임의식'의 공유와 실천이 필요, 고려인들은 과거 우리사회의 시민인 동시에 현재의 시민, 국가권력이 유보된 사회적 책임을 이제라도 다해야

80

지역사회의 과제

고려인 맞춤형 지원

-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
- TF 등 전담 협의체 구성
  지자체 이주노동, 다문화가족지원 등 이주민 관련 담당 성원, 고용노동부, 법무부, 이주민지원단체, 연구자, 고려인 당사자 조직 혹은 개인 참여
- 실태조사와 지원 기본 계획 수립
- 한국어 교육 지원
  장시간 노동 고려, 사업장 연계 교육 프로그램 및 비대면 콘텐츠 개발과 배포
- 지역 고려인 활동가 양성 및 지원
- 이주민 & 이주노동 지원기관 통번역 활동가 확충,
  활동가 노동조건 개선,
  분야별 전문 통번역 역량 강화 지원

81

지역사회의 과제

고려인 맞춤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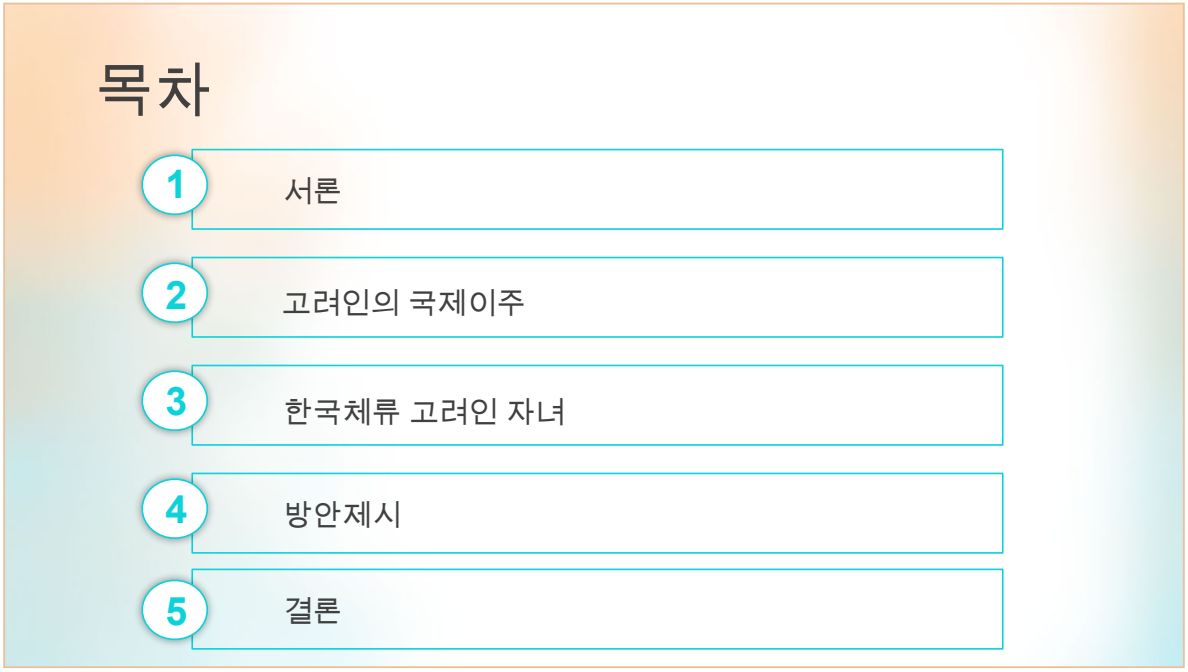
- 다언어 노동교육 지원
  다언어 노동교육 프로그램 및 비대면 콘텐츠 개발,
  다언어 표준근로계약서, 노동인권가이드라인 배포
-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고용 위기에 대응,
  직업 전환 교육 및 구직 지원
- 고려인 집중 사업장 및 직업소개업체 특별 근로 감독
- 자조모임 등 고려인 당사자 조직 활동 지원
- 재난정보 접근권 강화, 재난시기 소득 지원
- 특별건강검진 등 건강권 지원 사업
- 사회적 돌봄 및 주거 지원
- 선주민 대상 고려인 인식 개선 캠페인

82

고려인 자녀의 한국생활적응 교육 지원

윤향희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고려인 자녀의 한국생활적응 교육지원
윤향희
충남연구원


목차
1 서론
2 고려인의 국제이주
3 한국체류 고려인 자녀
4 방안제시
5 결론

서론

- 일제강점기인 조선 말 러시아지역으로 이주한 자들과 그들의 자손을 가리켜 고려인이라 함
- 농업이민, 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의 이유로 이주
- 1991년 소련의 해체 -> 15개의 독립국 창설 -> 각자의 고유 언어 사용
  : 러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고려인은 언어 문제를 겪기 시작
-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 귀환하는 고려인 동포 증가

- 고려인은 한국인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입국 후 한국어의 부족으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국에서는 고려인을 한국인이라기보다는 한국체류 외국인과 같은 외국인으로 봄
- 이 논문에서는 한국으로 입국 한 고려인 자녀를 대상으로 함
- 이들이 입국 후 생활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방안 제시하고자 함
  : 학교 교육, 또래관계, 한국어 문제 등

- 구체적인 연구 질문

1) 고려인 자녀는 한국 입국 전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졌는가?
2) 고려인 자녀의 학교 교육 과정 중 한국어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는가?
3) 입국 초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중언어 강사의 도움을 받아 수업이 진행되는가?
4) 한국어 부족으로 학교 친구들과의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가?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충남에 거주하는 고려인 부모와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

고려인의 국제이주

- 2020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체류 외국국적동포 체류현황 829,440명
-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재외동포는 76,235명
- 미등록 외국인과 한국거주와 영주권 포함하면 수는 더 늘어날 것
  - > 한국체류 고려인의 정확한 인구수 파악하기 어려움
- 가장 많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고려인은 우즈베키스탄인

- 고려인의 한국 이주는 재외동포이주와 방문취업으로 한국에 입국
  - > 본국에서보다 높은 소득을 획득하기 위함
- 우즈베키스탄은 민족중심적인 정책으로 소수민족의 차별정책 시작
- 우즈베키스탄 내의 전문직종, 고위직에 고려인들의 진출 제한됨에 따라 고려인들의 사회, 경제적 어려움 증가 - > 이에 국외로 이주 시작
-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에 따라 해외 이주 원인은 경제적 확보였음

-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고려인들에게 우즈베키스탄 국어가 우즈벡어로 변화 - > 우즈베키스탄의 언어 습득에도 어려움 발생
- 1991년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 > 고려인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지역으로 이주

- 이러한 이유로 고려인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됨

- 고려인은 언어소통이 가능한 러시아의 다양한 지역으로 이주

  : 러시아어의 기반, 국적취득의 가능성 그리고 경제적 소득의 증대를 목적으로 함

- 고려인은 이러한 경제적 소득의 증대로 한국으로의 이주 시작
- 2002년 '재외동포법'에서 취업관리제가 도입되면서 부터 시작됨

  : 중국과 독립국가연합지역 동포대상 한국에서 단순노무 분야 취업 허용

- 2007년 방문취업제 도입으로 재외동포의 한국 입국은 더더욱 증가

- 재외동포, 방문취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특히 60세 이상의 고려인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 이들은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으로 비교적 한국과의 왕래가 자유로움

-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고려인은 방문취업의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

  : 최대 4년 10개월

- 방문취업의 체류자격자들은 ↓ 재외동포 체류자격자들은 ↑

고려인 자녀의 한국으로의 이주

- 고려인의 한국 입국 초기에는 홀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음
- 고려인들의 한국 입국으로 인해 본국 가족 유형이 변화하고 있음

  : 부 또는 부모가 한국으로 떠나게 되면서 그들의 자녀는 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게 됨.

  혹은 고모나 이모 등

- 한국에서의 적응 이후, 고려인의 자녀는 한국으로 입국하여 가족의 재결합이 이루어짐

이렇듯 국내거주 고려인 부모들은 가족관계에서,
상호존중과 자녀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음

고려인 자녀의 한국생활 적응의 어려움

1) 한국에 입국하기 전 부모의 부재 - > 조부모 또는 부모의 형제와 함께 생활

2) 입국 한 후에도 또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됨

  : 문화적응 스트레스 - > 불안감과 우울, 외국인으로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선 등

  : 입국 후 가족결합으로 함께 생활하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지만,

  부모님의 힘든 노동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 부족, 대화시간 ↓

  - > 언어적, 문화적 적응 관련 스트레스 ↑

한국체류 고려인 자녀의 어려움 파악

고려인 자녀의 학교교육 과정에서 한국어 부족으로 학교생활의 어려움

+

학교 교육 시 이중 언어 강사의 도움으로 학교 교육의 도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고려인을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충남에 거주 중인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 8명, 그들의 부모 5명

고려인자녀의 한국체류의 어려움 분석

재외동포 고려인 자녀의 한국생활과 학교생활 중 한국어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한국생활적응 및 학교생활과 관련해 정체감 혼란과 스트레스에 관하여 분석

학교생활에서의 한국어 학습 정도

- 고려인 자녀는 부모의 한국 입국으로 자신도 언젠가는 한국에 입국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 한국 입국 준비를 위한 노력으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
  - > 답변 :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8명 모두가 답변

2. 한국 입국 전 한국어교육

- 고려인 자녀가 한국 입국 전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부모님이 먼저 한국에 가셨어요.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부모님이 한국으로 이주를 하였지만 우리는 언제 한국으로 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고려인자녀 G)
> 제가 있는 곳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학원 같은 곳이 없어요. (고려인자녀 H)

- 고려인 자녀는 한국 입국 전 한국어 학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함
  : 자신이 언제 부모님과 함께 생활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

고려인자녀의 한국체류의 어려움

학교생활에서의 한국어 학습 정도

한국 입국 직후 한국어 교육

- 한국 입국 후 한국어 교육이 바로 이루어졌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음

학교에 가서 한국말 전혀 몰라서 공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하지 못했어요.*(고려인자녀 D)*

한국에 와서 바로 학교에 안 갔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동생과 함께 지냈어요.*(고려인자녀 E)*

한국에 와서 한국어 공부 안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바로 가지 않았어요. 한국에 온 후 *4*달이 지나서 학교에 갔어요. 그때까지 한국어 공부하지 않고 그냥 고향 말로 말했어요.*(고려인자녀 F)*

고려인자녀의 한국체류의 어려움

학교생활에서의 한국어 학습 정도

한국 입국 직후 한국어 교육

- 한국 입국 후 한국어 교육이 바로 이루어졌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음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에 가야하는지 중학교에 가야하는지 잘 몰랐어요. 엄마가 친구들과 여기저기서 물어보고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학교를 알아보는 동안 저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집에서는 아마 *6*개월 정도 혼자 있었어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엄마가 공부하는 곳 따라 다녔어요.*(고려인자녀 H)*

고려인 자녀는 한국으로 입국 한 후에도 바로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

- 한국에서의 학교 교육기관의 입학시기 3월, 이들이 3월 이후 입국하는 경우 학교의 수업 시수가 맞지 않아 입학할 수 없었음
- 한국 입국 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서 이들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학교생활에서의 한국어 학습 정도

학교 진입 후 학교 교육에서의 어려움

- 한국 입국 후 한국 학교 진입 후 학교 교육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답변

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5학년으로 갔어요. 친구들과 나이도 다르고 말을 할 수 없어서 힘들었어요(고려인자녀 *H)*

한국말 잘 몰라요. 학교에서 잘 못해요. 선생님 말 어려워요. 재미없어요.(고려인자녀 *A)*

우리 한국말 못해요. 그리고 어려워요.(고려인자녀 *B)*

학교에 와서 친구들 공부 할 때 저는 그냥 앉아만 있어요. 선생님이 잘 해줬는데 그래도 힘들었어요.(고려인자녀*D)*

학교생활에서의 한국어 학습 정도

학교 진입 후 학교 교육에서의 어려움

- 한국 입국 후 한국 학교 진입 후 학교 교육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답변

- 학교에 들어간 후 한국어 부족으로 학교생활과 학교교육에서 어려움을 느꼈다고 8명 모두 답변
-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진입하는 경우 어려움이 더 많았음
- 저학년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학교생활 어려움은 물론 교우관계에서 어우러짐 부족

학교생활에서의 한국어 학습 정도

학교에서 한국어교사의 한국어 교육

- 학교 진입 후 학교 교육에서의 한국어교사의 한국어교육이 개설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

학교에 한국어 선생님 없어요.(고려인자녀 *D*)
일주일에 *3-4*시간 정도 밖에 한국어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할 때 학교 공부는 안 해요.(고려인자녀 *E*)
한국어를 모르니까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매일 한국말 들으니까 조금씩 괜찮아졌어요.(고려인자녀 *F*)

학교생활에서의 한국어 학습 정도

학교에서 한국어교사의 한국어 교육

- 학교 진입 후 학교 교육에서의 한국어교사의 한국어교육이 개설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

한국어 선생님 없어요. *1*년 정도 지난 후에 한국어 선생님 학교에 왔어요. 그런데 *1*년도 공부하지 않았어요.(고려인자녀 *G*)
처음 학교에 갔을 때에는 한국어 공부를 안했어요. 두 달 정도 지나서 한국어 선생님이 왔어요. 그런데 한국말 몰라서 공부 할 수 없었어요.(고려인자녀 *H*)

학교생활에서의 한국어 학습 정도

학교에서 한국어교사의 한국어 교육

- 학교 진입 후 학교 교육에서의 한국어교사의 한국어교육이 개설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

- 고려인자녀 8명 중 6명 - > 학교에 들어간 후 2개월이 지난 후 한국어교사와 수업 시작
- 2명은 학교에 한국어 교사가 있지 않았음
- 2명 중 1명은 1년 쯤 지난 후에 한국어교사와 한국어 공부를 했지만 함께 공부한 기간은 6개월 정도라고 함
- 1명은 학교에 들어간 후 지금까지 한국어 교사가 없었으며 방과 후 과정으로 공부

학교생활에서의 한국어 학습 정도

학교에서 이중언어 강사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도움

- 학교에 진입한 후 한국어의 부족으로 이중언어 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기도 함
- 이중언어 강사의 도움으로 학교교육에서의 어려움에 많은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답변

이중언어 선생님이 러시아 말을 사용해요. 그렇지만 잘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우즈베키스탄 말로 해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고려인자녀 C)*

저는 학교에 이중언어 선생님, 한국어 선생님 모두 없었어요. 방과 후에 다른 교실에 가서 한국어 공부 더 했어요.*(고려인 자녀 D)*

학교생활에서의 한국어 학습 정도

학교에서 이중언어 강사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도움

- 학교에 진입한 후 한국어의 부족으로 이중언어 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기도 함
- 이중언어 강사의 도움으로 학교교육에서의 어려움에 많은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답변

저는 러시아 말 조금 밖에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면 잘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러시아말 잘 못해요. 그냥 사전 찾아 보여줘요.*(중도입국자녀 E)*

러시아 말을 하는 선생님인데 러시아 말 잘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고려인자녀 G)*

학교생활에서의 한국어 학습 정도

한국어 부족으로 주변인과의 어려움

- 한국어 부족으로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에 대한 답변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어도 한국어 못해서 함께 지내기 힘들어요. 친구들이 웃으면서 말하면 그냥 따라 웃어요.*(고려인자녀 A)*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친구들은 다 알고 저만 모르는 것이 있어요. 다시 물어보면 대답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물어본다고 하고, 잘 들으라고 해요. 그때 많이 기분 안 좋아요.*(고려인자녀 D)*

- 인터뷰에 참여한 고려인자녀 8명 모두 한국어의 부족으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답변을 함

학교생활에서의 한국어 학습 정도

그 외 학교생활의 어려움

- 한국어 부족으로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에 대한 답변

같은 학년 애들보다 제가 두 살 더 많아요. 이런 것이 조금 힘들어요.*(고려인자녀 E)*
한국말을 하지 못하고 외국인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했어요.*(고려인자녀 F)*

- 같은 학년과의 연령이 다르고, 자신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바라보는 느낌 등을 받아서 함께 어울리지 못했다는 답변 등이 있었음

고려인자녀의 한국생활적응

- 고려인 자녀의 한국생활 적응과 학교생활과 관련해 문화적응과 정체감 혼란 및 스트레스에 대해 부모와의 면담이 이루어짐

1) 고려인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어려움

애들이 한국어를 모르니까 학교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었어요. 저도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고 또, 일하러 가야 해서 애들을 잘 챙기지 못했어요. 애들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부모와 함께 있어서 좋아했지만 학교에 가기를 힘들어했어요. *(고려인부모 A, C)*
우리 아이는 아직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어려워해요. 아마 한국어를 모르니까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들 있는 곳에 가면 항상 제 옆에만 있어요.*(고려인부모 B)*

고려인자녀의 한국생활적응

- 고려인 자녀의 한국생활 적응과 학교생활과 관련해 문화적응과 정체감 혼란 및 스트레스에 대해 부모와의 면담이 이루어짐

1) 고려인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어려움

애들이 한국어를 모르니까 학교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었어요. 저도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고 또, 일하러 가야 해서 애들을 잘 챙기지 못했어요. 애들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부모와 함께 있어서 좋아했지만 학교에 가기를 힘들어했어요. *(고려인부모 A, C)*

우리 아이는 아직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어려워해요. 아마 한국어를 모르니까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들 있는 곳에 가면 항상 제 옆에만 있어요.*(고려인부모 B)*

처음 학교에 갔을 때 가기 싫다고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고 친구들과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학교에 있다가 온다고 했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일을 해야 하니까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만 해요. 학교에 한국어선생님이 있어서 우리 아이처럼 한국어 모르는 학생들 공부해주면 좋겠어요.*(고려인부모 D)*

우리는 러시아어를 배웠지만 아이들은 우즈베키스탄 말보다는 잘하지 못해요. 공부 도와주는 러시아선생님 있어요. 그러나 러시아 말을 잘 못해요. 말하는 거 틀리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전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도움 안돼요. 아이들만 더 힘드는 것 같아요. 한국어 몰라요. 러시아어도 다르게 말해요. 그래서 아이들 더 어려워요. *(고려인부모 E)*

- 한국어의 어려움으로 겪는 자녀의 자신감 부족, 학교 부적응
- 한국어교사의 부재로 자녀의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 이중언어강사의 부족한 러시아어가 한국어를 배우는 고려인 자녀에게 더욱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답변을 함

고려인자녀의 한국입국 후의 어려움

1. 한국에 입국하기 전 한국어 교육을 받지 않고 한국에 입국함
   : 한국에 언제 오는지에 대해 알 수 없었음, 본국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음
2. 고려인 자녀의 학교 진입 후 한국어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음
   - > 진입한 후 학교에서 관할 교육청에 한국어 지원을 요청해야 이루어짐. 2~3개월 소요
     그 기간에 고려인자녀들은 한국어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야 함
     8명 중 5명만이 한국어 교육 지원을 받았음
3. 한국 입국 초 이중언어 강사의 도움을 받아 학교 수업 진행됨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았음
4. 한국어 부족으로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 발생

방안제시

1. 고려인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한국어교사의 교육시간을 늘려야 할 것임
2. 고려인자녀의 학교 교육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중언어 강사
   - > 러시아 또는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으로 결혼 이주한 여성이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강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TOPIK4급 이상의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이중언어 강사로 적합하다고 여김
3. 한국어 부족으로 또래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링을 선정하여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함

결론

1. 고려인 자녀의 한국 입국 전 한국어교육의 사전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한국 입국 후에도 고려인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학교 교육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이중언어 강사의 활용이 요구됨

한국 체류 고려인 자녀의 한국에서의 생활적응 및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Thank you

지역 고려인의 현실

박사다 | 당진지역 고려인

충남지역 고려인의 현실

박사다 | 당진지역 고려인

고려인 이주 현실과 지자체 지원제도의 모색

김진영 | 사단법인 너머 사무국장

토론문 | 고려인 이주 현실과 지자체 지원제도의 모색

김진영 | 사단법인너머

우복남 박사님의 자료에서 고려인동포를 기준으로 내용을 검토하면, 고려인의 국내 인구는 전국 약8만이며, 충청남도에 약1만6천으로 전국의 약 20%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F1 동반자녀등은 포함되지 않음(포함시 10~20% 추가 약9만~10만 추정))

그러나 발제문에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가족을 동반하여 이주 정착하고 있는 동포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없어 단지 외국인 방문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인 가족의 정착 지원, 차세대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 교육, 돌봄, 건강등 국제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 책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려인의 빈곤경험에 대한 실태조사는, 3명중 1명이 경제적 빈곤으로 의료서비스를 포기하고, 공과금을 밀린 경험도 25%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 대상의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인 대상 2018년 조사(0.6%, 1.6%)보다 30,40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실태조사는 고려인의 경제적 자립과 적응을 위한 기초 생활 기반 제공이 절실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과제로서, 고려인 지원조례와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기구를 충남의 현실에 맞게 구성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원 사업으로서 경기 안산시 사례와 같이 동포 인식개선사업, 돌봄사업을 주요 정착지원사업으로 제시하셨고, 또한 광주 월곡동 고려인마을이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전방위적인 고려인 지원사업, 플랫폼구축을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사례로 보여주셨습니다.

참고 | 고려인 집중 거주지에서의 고려인주민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2020 인천여성가족재단, 고려인주민, 지역주민 면접조사 요약

	고려인주민	지역주민
거주지	친인척, 지인 그리고 일자리, 학교등의 주거환경	긍정적(73%)-지역경제 활성화 부정적(33%)-갈등유발, 환경훼손
고려인 정체성	코리안이 아닌 이방인	안타까움, 인구문제완화 영역침범, 잠재적범죄
생활적응	한국어학습의 부족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 한국어능력부족으로 공적제도접근이 거의 안됨	일상대화의 어려움 기본생활수칙 이해부족
자녀	취학전 자녀 보육료 부담 자녀의 학교입학, 학교, 학습적응의 어려움 생계유지, 언어소통문제로 고려인학부모로서의 부모역할상실	다문화학교에서의 역차별 방치되는 고려인자녀 돌봄필요
지역주민관계	상호이해결여로 배타적이거나 비난의 대상 새로운 공동생활수칙의 적응과정에서 이웃 간 갈등	간단한대화, 인사, 음식나눔 사회문화적 차이, 사회적규범 미준수에 의한 갈등
정착지원	지역공동체로서 공동 협력 자녀홀로 극복해야할 학교생활에 대한 지원 정보, 편익시설, 공간	통역 및 인적자원발굴 문화교류, 교육

고려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 지원 방향으로 다음 세가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첫째, 인식개선사업

인식개선 사업은 고려인을 뿌리내리게 하는 힘이 되며, 고려인을 지역주민으로 받아들이고 소통해야할 이웃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 사례 | 고려인인식개선사업 '이웃집 고려인 톡콘서트', 고려인이해강사양성과정, 고려인사진전등(너머,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안산시외국인주민본부, 선부동주민센터)

몇 세대동안 스스로 고려인, 한인으로서 지켜온 정체성이 고국에 와서 이방인으로 낙인되는 것은 고려인들을 이곳에서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주민들과 고려인주민 간의 소통, 생활 문화의 차이등으로 빚어지는 문제들은 고려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으로 이방인이 아닌 이웃 주민으로 받아들이면서 갈등을 해결하고 함께 할 주체가 됩니다.

둘째, 차세대 돌봄, 교육사업

고려인아동 돌봄, 교육사업은 지역의 발전 기반이 되며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부모가 모두 일을 하거나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높은 고려인가정에서 미취학 아동의 보육지원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현재, 안산, 시흥등 보육료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취학아동의 경우 방과 후 한국어학습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부모의 조력이 안되고 방치되어 있는 고려인 아동들에게 방과 후 돌봄 제공은 지역사회가 공동체로서 함께해야 할 과제입니다.

> 사례 |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돌봄 및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방과후 학습지원

셋째, 소통 지원과 정보 제공

지역주민과 고려인주민간의 소통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언어지원 시스템 구축은 경제 활동하는 고려인들에게 사회 및 지역내 소속감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보에 소외되지 않음으로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 하게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은 '관할구역 안에 주소가 있는 자' 에 해당하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고려인 정착지원 추진과 지침 등의 가이드를 마련하고 인력의 확충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주민센터내 통역상담사, 생활정보, 교육, 소통공간등을 제공하고, 지역의 노동권익센터 또는 비정규센터등을 통한 고용안내, 노동상담 에 대한 러시아어 통역원 및 상담지원은 고려인들이 지역내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큰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 사례 | 안산고려인문화센터, 너머 상담소운영, 안산시외국인상담센터, 보건소, 주민센터, 고용센터등 러시아어 통역 및 상담을 지원 확대하고 있음.

지역 주민으로 고려인 동포를 대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우삼열 |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지역 주민으로 고려인 동포를 대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우삼열 |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회사 사장님이 싸인을 해주지 않아서 다른 회사로 못 가고 있어요."

아침부터 찾아온 고려인들이 답답하다며 도움을 청한다. 다른 회사로 가려는데 회사에서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용을 들어보니 이들은 고용허가제 특례대상인 동포들로 H-2비자 소지자들이었다. 이들에게 고용주의 동의와 허락이 있어야만 다른 회사로 갈 수 있다고 설명하자 납득을 하지 못하는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미 약속한 다른 회사가 있어서 현재 회사의 싸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장이 화만 내고 있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다.

이 사례의 경우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의 규제 조항에 의해 마음대로 회사를 바꾸지 못한다. 고용주의 동의와 신고를 전제로 근무처 변경이 가능하다. 자신의 체류자격 종류와 권한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을 만날 때마다,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제도의 문제와 대처방법을 알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미 센터 상담일지를 모아놓은 파일철에는 구 소련권에도 온 고려인 동포들의 각종 임금체불 문제를 다룬 자료들이 수북하다. 20명 가량 단체로 피해를 당해 집단으로 진정을 제기한 사건도 여럿이다. 일하는 회사와 월급 받는 소속업체가 다르지만 급여체계조차 대부분 모른다.

고려인 동포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이들의 국내 체류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하는지 불명확하여 논쟁의 소지가 매우 크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적용 기간을 5년 가량으로 보는 판례들이 많은데, 이는 이들의 체류 기간이 5년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려인 동포들의 경우 영주권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평생 한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이들이다. 때문에 현재 그가 가진 비자의 기간을 근거로 체류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더욱이 상당수 고려인들이 직업소개소를 통해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허가 업체나 개인 브로커를 통해 일하다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자신을 데려가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모르고, 업체 이름을 모르며, 업체 주소도 모르는 이들을

종종 만난다. 그들은 오로지 무허가 브로커 한 사람의 휴대폰 번호만 가진 채 센터를 방문하여 체불임금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곤 한다. 이들의 체불금을 받으려면 그야말로 귀신을 잡으러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 절로 한숨이 나오곤 한다.

자녀교육에 대한 이들의 고민을 들을 때에는 또 다른 난감함을 느끼게 된다. 고려인 동포인 부모를 따라 국내에 정착한 아이들의 경우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경우 자신보다 어린 나이의 동급생들과 수업을 듣거나 별도의 특별학급에 편성되기도 하는데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나타난다. 담임교사와의 대화가 어려워 학생이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집으로 발송된 가정통신문 내용을 부모가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료가 한국인에게만 지원되고 있어 동포들 중에는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명의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백만원에 가까운 돈을 매달 부담해야 하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중국동포 자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육료 지원이 한국 국적자에게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 E-9 비자 자격 노동자들은 아예 가족이나 자녀를 초청할 수도 없다.

이런 문제들을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고려인 동포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인식이 현실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로서의 삶과 한국계 이주민으로서의 삶을 동시에 살아야 하지만, 이들은 중국동포들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 이들은 중국동포들에 비해 언어 적응력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 현장에서의 불이익과 시행착오, 그리고 각종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자녀교육, 사회복지, 의료, 언어소통, 생활법률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각종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중국동포들처럼 알아서 잘 적응할 것이라는 안이한 정부당국의 인식이 이러한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늘 발제자들의 발표 내용에서 현 상황의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또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대책과 해결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이 시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는, 고려인 동포들이 가진 특성을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다. 이들은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하게 되는 다른 체류자격자들과 구분되며, 대부분 정주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때문에 이들은 앞으로 많은 중국동포들과 같이 영주권 취득을 통해 정주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노동자로서만이 아니라 사실상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이들이라면, 고려인들이 가진 정체성에 대해 우리 사회와 정부가 진지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동포와 다르게 언어적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겪고 있는 취업사기, 임금체불, 자녀교육 등 다양한 문제에는 사회적응력 부족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적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 정착이 원할히 이루어지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중국동포들과 다른 또 다른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다양한 나라에서 국내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하나의 언어로만 사회적 집단으로 규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이라 보여진다. 각종 자조모임과 연합회, 협회 등을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에 비해 이들은 강력한 결속력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인 동포 사회가 조직화되는 속도가 매우 느린 것을 보면,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사업과 함께 시민사회에서도 지원활동과 역할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력과 지원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지난 해 11월 아산이주노동자센터는 CIS와 고려인 동포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률 교육 사업을 3회에 걸쳐 진행한 바 있으며, 금년 4월에도 최저임금 교육을 2회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정착 지원 체계도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려인 동포 지원방안

김학로 | 당진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지역 고려인동포 지원방안의 모색

김학로 | 당진역사문화연구소 소장

1. 고려인동포의 정의

고려인동포는 조선말부터 1945년 해방 이전 구소련령에 거주하던 한인동포를 지칭한다. 러시아권에서는 한인을 '카레이스키'라 불렀는데, 스스로는 '고려사람'이라 불렀다. 소련권 동포들이 스스로 '고려사람'이라 불렀던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남북이 분단된 가운데 조선인이나 한인이라 부르게 되면 남과 북 어느 일방을 편드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고려인이라 불렀다는 것이 정설이란 점을 감안하면, 강제 이주의 아픔 속에서도 남북통일을 기원했던 고려인동포들의 동포애가 느껴진다.

2. 입국과 체류의 문제

고려인들의 입국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이 허용되면서 급속히 불어나고 있다. 고려인들은 재외동포로 인정되어 입국할 수 있지만 모든 고려인들이 재외동포비자(F4)를 받고 입국하는 것은 아니다. 복잡한 비자제도의 문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러시아를 제외한 중앙아시아국가 출신 고려인동포는 재외동포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방문취업비자(H2)를 받아 입국하는 것은 동포에 대한 차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고려인동포의 경우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준비없이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준비없는 입국은 체류와 정착과정에서 적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최소한 입국 이후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위한 적극적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3.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고려인의 입국 목적은 '이주노동'과 '정착'에 있다. 이주노동자로 자리를 잡으면 가족을 초청하는 것은 정착을 위함이다. 이주노동자 고려인은 언어적 한계로 인해 말이 필요없는 노동 업무에 조사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열악한 근로조건과 저임금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장시간 노동은 정착과정에서 자녀를 돌볼 여유를 빼앗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에 서툰 중도입국 고려인동포 자녀들은 학업에 뒤쳐지게 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적응에 실패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1년이면 충분하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이들이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입국 초기부터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4. 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과 근거

고려인의 법적인 지위는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이다. 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소관사항이다. 자치단체에서는 고려인동포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 없다. 따라서 외국인이나 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정책 계획 자체가 없고 준비하려는 의지도 없다. 간혹 어설프게 다문화 지원사업 정도로 인식하여 지원사업을 고민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외국인이나 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정책을 왜곡하거나 방해하는 문제로 발전하기도 한다. 모두 무관심과 무지에서 오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법적인 근거도 분명하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의 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하여 주민이기 위해서는 꼭 대한민국 국민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의 경우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고, 지방선거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거나 주민이 될 수 있는 고려인동포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을 때, 고려인동포에 대한 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은 행정적 책임의 문제도 아니고, 복지에 대한 수혜의 문제도 아닌 의무사항이 된다.

5. 조례의 제정과 체계적 행정

주민이거나 주민이 될 수 있는 고려인동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행정에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외국인이거나 동포인 고려인동포를 방향이 다른 다문화 지원업무로 해결할 수 없다. 한인동포 전담부서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외국인정책 부서를 설치해서라도 고려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외국인 비율 전국 최고의 충남에서 외국인에 대한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자체 지원제도의 모색

소병욱 | 충청남도 가족다문화정책팀장

지자체 지원제도의 모색

소병욱 | 충청남도 가족다문화정책팀장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충청남도의회